

KIPF Public Institutions Issue Focus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2019 | vol. 29

| 연구동향

-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시사점

| 정책동향

-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 국민 생명·안전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 심층동향

-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현황과 공공기관의 역할

-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공공기관 지정 제도 운영 현황과 금융감독원 관련 쟁점

| 소통의장

| 전문가의 눈 |

- 학력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공공기관에서 앞장서기

| 현장의 소리 |

- 'Do Wonders' 기적을 이루는 새만금개발공사

| 기관장 인터뷰 |

-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

| 전문가 좌담회 |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안

KIPF Public Institutions Issue Focus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2019 | vol. 29



● 연구동향

- 06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민경률(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정책동향

- 24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 32 국민 생명·안전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 심층동향

- 42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현황과 공공기관의 역할
서영빈(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63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유승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84 공공기관 지정 제도 운영 현황과 금융감독원 관련 쟁점
정예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소통의 장

전문가의 눈

- 106 학력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공공기관에서 앞장서기
한동숙(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현장의 소리

- 111 'Do Wonders' 기적을 이루는 새만금개발공사
정의운(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과장)

기관장 인터뷰

- 116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

전문가 좌담회

- 129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안



연구동향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민경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01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민경률⁰¹

I. 서론

- 인터넷 환경의 발전 및 모바일의 생활화로 인한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
 -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이나 제공 서비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며, 국민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과 무관한 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의 일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함
 -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정부 업무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을 쉽고 편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krmin@kipt.re.kr)

-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는 정부 PR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정부는 소셜미디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공직자를 위한 SNS 사용 길라잡이(2011)’,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2013)’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모든 중앙부처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많은 기관에서 소셜미디어 기자단 등을 운영하여 딱딱하고 어려운 정부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공공기관도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의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난해 말 진행된 제11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⁰² 공공부문에서는 경찰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종합대상을 받기도 함
 - 공공기관의 효율적이면서도 솔직한 정책홍보는 국민과의 거리감을 줄여줌으로써 공공기관과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미디어 환경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전달이 정책대상자인 국민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또는 소셜미디어의 장점인 양방향 의사소통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김용희 외, 2018)
 -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용도에서 큰 격차가 있음
 -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뿐만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인 (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고객인 국민과 소통 잘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 확산을 위해 매년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아니라 기관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 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국민과 소통의 목적보다는 일방적인 정보전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콘텐츠 생산의 한계로 어려움을 느껴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에 머물러 있음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공공기관과 국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소셜미디어 채널 특성을 바르게 알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I. 공공기관의 정책홍보 매체로서 소셜미디어

- 공공기관의 정책홍보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음
 - 언론을 통한 일방향적 의사소통 중심의 정책홍보를 해오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미디어 채널의 등장으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많아졌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회임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과 정보들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공공기관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잘 전달되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고려해야 함
- 공공부문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시작은 PC통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1993년 김영삼 정부로 볼 수 있으며, 쌍방향 의사소통을 지향점으로 삼아 점차 발전해 왔음(〈표 1〉 참조)

〈표 1〉 역대 정부의 온라인 소통과 소셜미디어 홍보

시기	국정 키워드	방향	주요 내용	환경
김영삼 문민 정부 (1993.2~1998.2)	문민 세계화	PC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	• 최초의 PC통신 '청와대 큰마당'으로 시작 하여 1995년에 최초의 홈페이지 개설 • 국민이 직접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	PC통신 인터넷 등장
김대중 국민의 정부 (1998.2~2003.2)	국민 정보화	홈페이지를 통한 본격 정보서비스와 쌍방향 소통	•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국정 브리핑] 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제공	초고속 인터넷망 ADSL 보급
노무현 참여 정부 (2003.2~2008.2)	참여	인터넷 정책 홍보시대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 국민 소통을 위한 정책포털과 국정브리핑, 블로그 등을 활용해 국민참여 주력 • 정부 부처의 채널을 개설하여 국민참여 채널 운영	웹2.0 전자정부
이명박 정부 (2008.2~2013.2)	소통	네티즌과 대화시대	•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신설 • 청와대 온라인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부처에 온라인 대변인 임명	모바일 혁명 SNS
박근혜 정부 (2013.3~2017.4)	개방·공유	창조경제의 중심 정 부3.0위원회 설치	•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 창조경제포털 운영	창조경제 빅데이터
문재인 정부 (2017.5~)	국민주권, 소통과 통합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시대	• 광화문 1번가(온·오프라인 운영) • 청와대 TV	제4차 산업혁명

자료: 공병훈·조정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민소통 강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7, pp. 4-5)

-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소셜미디어의 활용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김민경·조수영(2015)은 청와대와 17개 부처의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분석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점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일상의 이야기나 관계를 위한 메시지 전달 노력도 필요함을 지적함

- 339개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페이스북(247개 기관)과 네이버블로그(166개 기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기관 특성에 따라 네이버 TV나 카카오 스토리 등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339개 기관 중 64개 기관은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등 4개 이상을 소셜미디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반면, 82개 기관은 소셜미디어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표 2〉 공공기관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2019년 3월 기준)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미운영
공기업	36	28	13	10	11	19	7
준정부기관	93	75	34	19	33	56	15
기타공공기관	210	144	73	30	60	91	60
합계	339	247	120	59	104	166	82

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소셜미디어를 기준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함
 자료: 저자 작성

-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지 않는 82개 기관과 트위터와 블로그 등만을 운영하는 10개 기관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50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조사⁰³에 따르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페이스북과 네이버블로그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이용하는 국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특색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콘텐츠 생산에 어려움을 느껴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경우 또는 계정은 있지만 비공개로 설정하여 운영하지 않는 기관도 조사되었음
 - 소셜미디어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조직규모가 작아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홍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음에도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매체의 특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03 2018년 2월 6일~7일에 2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페이스북(239개), 네이버블로그(192개), 트위터(181개), 카카오톡(84개), 인스타그램(63개), 유튜브(42개) 순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함
 - 공공기관은 페이스북에서 정책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정보나 대상에 대한 검색이 아닌 유대를 통해 연결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같은 의미의 내용이어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가에 따라 다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이를 위해 페이스북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시지 전달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전략에 따른 국민의 반응도를 분석하고자 함

Ⅲ. 메시지 전달 전략

-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고객과의 소통, 기관과 제품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문 구분 없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페이스북은 크게 3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인 프로필과 기업·단체 등을 위한 페이지, 공개 또는 비공개 형태로 운영되는 카페 형태의 그룹으로 볼 수 있음
 -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페이지를 통해 방문자 활동에 대한 통계정보 생성 및 광고, 메신저,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확산으로 저비용으로도 숫자 제한 없이 팬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메시지를 유형화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메시지가 어떤 목적으로 게시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메시지 내용이 유형화되어 분류되고 있음

- 임지은·황장선(2014)은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정보제공, 일상, 프로모션, 브랜드이미지로 메시지 유형을 제시하였음
- 정보제공 유형은 정책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신상품 소개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만을 알리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일상 유형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국민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일상적인 날씨, 생활 속 이야기, 사회적 이슈 등을 말함. 프로모션 유형은 적당한 보상을 통해 좋아요/댓글/공유 등을 유도하고, 이벤트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말함. 마지막으로 브랜드이미지 유형은 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활동 등을 홍보하고, 사회 공헌 메시지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의미함
- 이상의 분류를 공공기관에 적용하기 위해 정보제공, 일상, 프로모션, 기관이미지로 수정하여 살펴보았음

〈표 3〉 메시지 유형 분류

메시지 유형	기존 연구 내 분류
정보제공	정책 소개, 서비스 정보, 기관 관련 메시지
일상	시기/날씨, 생활, 사회적 이벤트
프로모션	댓글/좋아요/이벤트 참여 유도, 행사참여 유도
기관이미지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 및 활동 안내, 사회공헌 메시지

주: 임지은·황장선(2014, p. 88)의 내용을 공공기관에 맞게 수정함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메시지에 호감을 가지게 된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함
 - 페이스북의 특성상 텍스트만으로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을 조합한 다양한 형태로 게시가 이뤄지고 있음. 어떤 방식의 게시물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가 알아보기 위해 이수범·김남이(2012) 연구를 참조하여 분석 유무를 재구성함
 - 게시물 형태는 먼저 텍스트와 시각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시각적 요소를 다시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벤트 유도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링크를 포함하였음

[그림 1] 게시물 게시 형태



주: 이수범·김남이(2012, p. 130)의 분류를 공공기관에 맞게 수정함

- 페이스북의 반응도를 분석하기 위해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공유를 살펴봄. 일부 연구에서는 좋아요, 댓글, 공유에 가중치를 두기도 하지만, 국내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빅풋9’의 방식을 참고하여 차등을 두지 않았음
 - 빅풋9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 반응 상대지수(PIS, Post Interaction Score)를 사용하는데, 이는 각 게시물의 좋아요, 댓글, 공유를 동일 배점으로 합산하여 각 게시물에 대한 순수 반응정도를 살펴보는 개념임
 - 이런 방식은 기관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음

IV. 메시지 전략에 따른 반응도 분석 결과

-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현황 및 메시지 전략에 따른 반응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공기업이 타 공공기관 유형에 비해 국민과의 접점 기회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공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8개 공기업⁰⁴에서 운영 중인 공식 페이스북을 조사함. 조사 기간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이며, 이 기간동안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을 분석하였음

〈표 4〉 공기업의 페이스북 운영 정보

(단위: 명, 건)

기관명	팬 수	게시물 수	반응(좋아요+댓글+공유)	반응/게시물 수
부산항만공사	5,378	84	1,154	13.7
여수광양항만공사	319	140	1,212	8.7
울산항만공사	2,640	164	1,712	10.4
인천국제공항공사	641,598	300	2,428,933	8096.4
인천항만공사	21,138	317	69,850	220.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5,532	238	3,252	13.7
주택도시보증공사	19,279	338	29,960	88.6
한국가스공사	59,685	234	33,257	142.1
한국공항공사	111,373	439	53,875	122.7
한국광물자원공사	15,537	122	525	4.3
한국남동발전	11,905	26	17,244	663.2
한국남부발전	20,926	154	6,446	41.9
한국도로공사	115,296	420	76,559	182.3
한국동서발전	14739	373	25,171	67.5
한국마사회	35,007	227	29,095	128.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48	27	336	12.4
한국서부발전	21,060	45	1,137	25.3
한국석유공사	7,680	289	4,034	14.0
한국수력원자력	84,064	294	31,219	106.2
한국수자원공사	135,350	486	72,410	149.0
한국전력공사	168,213	349	69,553	199.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4,040	50	529	10.6
한국조폐공사	8,763	266	49,439	185.9
한국중부발전	12,502	214	30,387	142.0
한국지역난방공사	42,353	228	15,267	67.0
한국철도공사	37,314	248	27,677	111.6
한국토지주택공사	97,713	397	63,808	160.7
해양환경공단	47,680	306	33,654	110.0

주: 2018년 1월 1일~12월 31일에 올라온 게시물 수와 전체 반응임
 팬은 기관페이지를 '좋아요' 한 사람을 의미하며, 2019년 3월 24일 기준임
 자료: 저자 작성

04 36개 공기업 중, 페이스북을 운영하지 않는 8개 기관을 제외한 28개 기관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755건의 게시물이 조사되었으며,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게시물 수가 다르게 나타남. 기관에 따라 1년간 26건의 게시물을 올린 기관이 있는 반면 486건의 게시물을 올린 기관도 있었음
-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음
 - 팬 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41,596명으로 타 기관보다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관 특성으로 외국인 이용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다음으로는 한국전력공사(168,213명), 한국수자원공사(135,530명), 한국도로공사(115,2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게시물 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공항공사(439건), 한국도로공사(420건), 한국토지주택공사(3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공유를 합산하여 살펴본 반응은 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428,93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한국도로공사(76,559건), 한국수자원공사(72,410건), 인천항만공사(69,8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큰 격차로 반응이 높은 것은 게시물마다 한글과 영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팬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계절 또는 시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월별 게시물 수를 살펴본 결과, 10월과 11월에 가장 많은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인 12월에서 2월까지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게시물의 월별 추이

(단위: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게시물 수	477	429	532	607	590	577	593	617	550	628	648	527
비율	7.0	6.3	7.9	9.0	8.7	8.5	8.8	9.1	8.1	9.3	9.6	7.8

주: 28개 기관의 게시물 대상으로 조사
자료: 저자 작성

- 앞서 살펴본 메시지 전략에 따른 게시물 수와 반응도를 살펴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타 기관보다 현저히 높은 반응도를 보이고 있어 타 기관과 함께 살펴보면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외함
 - 게시물은 ‘텍스트+이미지’(3,359건)와 ‘텍스트+이미지+링크’(2,581건)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미지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텍스트의 경우 단순 공지나 알림 형태로 종종 사용되는 것에 반해, 이미지로만 이뤄진 게시물은 그렇지 못해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텍스트+동영상+링크’ 형태일 때 반응(좋아요, 댓글, 공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영상이 높은 정보 전달력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동영상이 활용된 게시물이 반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게시물 건수는 185건으로 텍스트나 이미지에 비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표 6〉 메시지 표현별 게시물 수와 반응도(평균)

(단위: 건)

구분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이미지	텍스트+이미지+링크	텍스트+동영상	텍스트+동영상+링크
게시물 수	111	10	3,359	2,581	529	185
좋아요 수	41.1	21.3	67.2	58.1	72.7	79.0
댓글 수	10.8	1.3	36.2	31.3	40.5	53.3
공유 수	2.0	1.0	19.0	16.7	24.4	39.9

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한 27개 기관의 게시물 대상으로 조사
 자료: 저자 작성

- 메시지 유형에 따른 게시물 수와 반응도는 다음과 같음
 - 기관이미지를 나타내는 게시물이 2,0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일상(1,975건), 정보제공(1,391건), 프로모션(1,377건) 순으로 나타남

- 프로모션에서 좋아요, 댓글, 공유 수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프로모션을 제외한다면 기관이미지에서 좋아요와 댓글 수가 많았으며, 공유의 경우 정보제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메시지 유형별 게시물 수와 반응도(평균)

(단위: 건)

구분	정보제공	일상	프로모션	기관이미지
게시물 수	1,391	1,975	1,377	2,032
좋아요 수	32.5	29.6	183.8	35.2
댓글 수	4.7	3.5	149.7	5.2
공유 수	8.3	3.9	70.4	4.6

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외 27개 기관의 게시물 대상으로 조사
자료: 저자 작성

-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표현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기관별 메시지 표현에 따른 게시물 비율을 살펴보았음
 - 분석결과, 기관 전반적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하거나, 텍스트와 이미지 조합에 링크를 추가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기관별· 메시지 표현별 게시물 비율

(단위: %)

기관명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이미지	텍스트+이미지+링크	텍스트+동영상	텍스트+동영상+링크
부산항공사	0.0	1.2	54.8	27.4	14.3	2.4
여수광양항공사	1.4	0.0	14.3	81.4	2.9	0.0
울산항공사	0.0	0.0	3.7	94.5	1.8	0.0
인천국제공항공사	3.0	0.0	73.0	8.7	13.7	1.7
인천항공사	0.0	0.9	22.4	74.8	1.9	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4	0.4	67.6	12.2	16.8	2.5
주택도시보증공사	0.0	0.0	36.1	56.2	2.7	5.0
한국가스공사	0.4	0.0	14.1	76.1	2.6	6.8
한국공항공사	0.2	0.0	56.7	34.2	5.7	3.2
한국광물자원공사	0.8	0.0	0.0	99.2	0.0	0.0
한국남동발전	3.8	0.0	53.8	42.3	0.0	0.0

기관명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이미지	텍스트+이미지+링크	텍스트+동영상	텍스트+동영상+링크
한국남부발전	0.0	0.0	84.4	13.6	1.9	0.0
한국도로공사	1.2	0.0	41.0	26.0	23.6	8.3
한국동서발전	0.5	0.0	43.7	47.7	1.9	6.2
한국마사회	0.4	0.0	51.1	32.6	15.4	0.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7	0.0	51.9	29.6	7.4	7.4
한국서부발전	0.0	2.2	66.7	28.9	2.2	0.0
한국석유공사	0.0	0.0	24.6	72.7	0.0	2.8
한국수력원자력	1.4	0.3	56.8	27.2	10.9	3.4
한국수자원공사	0.0	0.0	64.6	25.3	6.0	4.1
한국전력공사	0.0	0.3	77.9	18.1	3.4	0.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0	0.0	68.0	26.0	4.0	0.0
한국조폐공사	10.5	0.8	71.4	10.5	6.0	0.8
한국중부발전	0.0	0.0	49.5	43.9	6.5	0.0
한국지역난방공사	1.3	0.0	28.5	63.6	6.6	0.0
한국철도공사	10.1	0.0	36.7	27.8	23.8	1.6
한국토지주택공사	6.0	0.0	65.5	18.1	8.6	1.8
해양환경공단	0.3	0.0	72.9	15.4	7.5	3.9

자료: 저자 작성

- 기관에 따라 메시지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관별·메시지 유형별 게시물 비율을 살펴봄
 - 기관마다 가장 많이 활용된 메시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일상(11개 기관)과 기관이미지(11개 기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정보제공(4개 기관), 프로모션(2개 기관)순으로 나타남
 -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프로모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이는 인천항만공사 이벤트의 당첨금액을 낮추고(편의점 2천원 또는 아메리카노 한잔 등), 당첨자를 소수로(2명, 5명 등) 진행함으로써 이벤트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횟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벤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관련 기관은 기관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발전시설 특성상 국민이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정보제공보다는 이미지 개선에 집중한 것으로 판단됨

〈표 9〉 기관별 · 메시지 유형별 게시물 비율

(단위: %)

기관명	정보제공	일상	프로모션	기관이미지
부산항만공사	19.0	69.0	6.0	6.0
여수광양항만공사	4.3	73.6	10.7	11.4
울산항만공사	14.6	54.9	18.9	11.6
인천국제공항공사	32.7	9.0	10.3	48.0
인천항만공사	2.8	7.6	82.0	7.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1.2	13.9	9.2	35.7
주택도시보증공사	45.0	12.4	12.7	29.9
한국가스공사	23.5	20.9	7.3	48.3
한국공항공사	31.9	2.7	28.5	36.9
한국광물자원공사	61.5	22.1	5.7	10.7
한국남동발전	3.8	0.0	38.5	57.7
한국남부발전	9.7	9.1	3.9	77.3
한국도로공사	34.3	24.8	22.4	18.6
한국동서발전	4.3	47.5	6.2	42.1
한국마사회	8.8	14.1	25.1	5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4	22.2	0.0	70.4
한국서부발전	8.9	0.0	13.3	77.8
한국석유공사	17.6	45.7	28.4	8.3
한국수력원자력	17.0	39.8	11.2	32.0
한국수자원공사	8.8	54.9	21.4	14.8
한국전력공사	7.2	49.9	15.5	27.5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36.0	2.0	0.0	62.0
한국조폐공사	24.4	12.0	33.1	30.5
한국중부발전	16.8	45.8	16.8	20.6
한국지역난방공사	18.4	19.3	29.4	32.9
한국철도공사	31.9	11.3	3.2	53.6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52.4	17.6	18.6
해양환경공단	20.3	24.8	27.1	27.8

V. 결론 및 시사점

-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메시지 전략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였음
- 소셜미디어 도입 초기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트위터보다는 네이버 블로그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 기관에 따라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 기관에서 3~4개, 많게는 7개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조사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특히 일부 기관은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는 등의 콘텐츠 확대와 방문자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임
 -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에 동일한 콘텐츠를 중복해서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셜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관 특성과 매체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관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정형화된 정보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와는 달리 소셜미디어는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나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기관 고유의 업무방식, 업무환경 등을 전달함으로써 기관의 특성과 친근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예산이나 인력의 제한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면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기관 여건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도 있음을 확인하였음

- 소셜미디어 운영 여부는 기관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선택적 사항이지만, 효과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페이스북 페이지를 메시지 전달 전략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음
 -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메시지 표현유형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한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응도 측면에서는 ‘텍스트+동영상+링크’ 형태의 메시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영상을 활용한 콘텐츠의 반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영상 제작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한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연을 짧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음. 이 게시물은 화려하거나 전문적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콘텐츠는 아니지만 사연을 담은 짧은 텍스트와 사진으로 구성된 이미지만으로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음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엇을 소통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와 무게감의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끝으로 소셜미디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의 참여와 구성원의 관심도 중요함. 미디어 기자단이나 외부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기관 구성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됨

참고문헌

- 김용희 외 2인, 「정책참여와 소통의 기제로서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 방식의 탐색적 고찰」,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제27호 제1권, 2018.3.
- 김민경·조수영, 「정부기관의 SNS 활용 및 수용자 반응 분석」, 『홍보학연구』, 한국PR학회, 제19호 제3권, 2015.8.
- 공병훈·조정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민소통 강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11.
- 이수범·김남이, 「페이스북 팬페이지 메시지 및 크리에티브 전략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한국소비자원, 제42호, 2012.8.
- 임지은·황장선, 「기업 페이스북 팬페이지 포스팅의 메시지 전략 유형에 따른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한국심리학회, 제15호 제1권, 2014.2.
- 한정호 외 4인, 『공직자를 위한 SNS 사용 길라잡이』, 문화체육관광부, 2011.8.
- 한국면세뉴스, 「인천공항공사, 디지털 고객소통 '최고' 인정 받아」 2018.11.22. <http://kdfnews.com/news/view.php?idx=32968> 검색일자: 2019.3.22.
- 빅풋9(<https://bigfoot9.com/>)
- 안전행정부,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 2013.4

정책동향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국민 생명·안전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02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 (개요) 기획재정부는 2019.1.30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6조에 따라 동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 지정 해제, 구분 변경하여 총 339개 기관을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함

〈표 1〉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공기업	35	36	+1
준정부기관	93	93	
기타공공기관	210	210	
합계	338	339	+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9.1.30)

- (공공기관 지정) 「공운법」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 신규 지정, 지정 해제, 유형 변경의 조치를 취함
 - (신규 지정)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7개 기관을 신규 지정
 - (지정 해제)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폐지되었거나, 소규모 기관 등의 사유로 지정 실익이 낮은 6개 기관은 지정 해제
 - (유형 변경)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10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

〈표 2〉 2019년도 공공기관 변동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기관수
신규 지정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7
지정 해제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재)정동극장,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6
유형 변경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인천항만공사 (기타공공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재)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9.1.30)

- (연구개발목적기관) 「공운법」 개정('18년 3월)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여 지정
 - 기타공공기관 중 69개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 지정함
 - 연구개발목적기관(69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20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25개)

- (조건부 지정 결과) '18년에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융감독원과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산은·수은은 조건 이행(일부 보완 조치)으로 기존 결정 유지함
 - (금융감독원) '18년에 조건부⁰¹ 지정 유보된 금융감독원의 유보조건 중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기이행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음
 - 상위직급 감축에 대해서는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함에 따라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함

01 ①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②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③ 엄격한 경영평가, ④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 (산은·수은) '18년에 조건부⁰²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
- (기대효과)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보다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를 통한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됨
 - 연구개발목적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관리체계⁰³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금번에 지정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2019.1.30.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026683&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9.1.30.

02 ①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②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③ 엄격한 경영평가

03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 성격 및 업무특성 반영, 능력 중심 채용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확보,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등

* 본 동향은 해당 기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재생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①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19년도 공공기관은 총 339개로 '18년 대비 1개 기관 증가

(단위: 개)

구분	'18년	'19년	증감	변경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5	36	+1			+1
· 시장형	15	16	+1			+1
· 준시장형	20	20	-			-
② 준정부기관	93	93	-			-
· 기금관리형	16	14	△2			△2
· 위탁집행형	77	79	+2			+2
③ 기타공공기관	210	210	-	+7	△6	△1
계	338	339	+1	+7	△6	-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7)	해수부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타공공
	복지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농림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환경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해제 (△6)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지정 해제
	해수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고용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문체부	(재)정동극장	
	법무부	IOM 이민정책연구원	
유형 변경 (10)	과기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국토부	주식회사 에스알	
	국토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업부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기부	창업진흥원		

참고 ②

2019년 공공기관 현황 (339개)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1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10)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위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양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여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홍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참고 ③

연구개발목적기관 별도 분류 현황 (69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0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5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산업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통일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전기연구원	(재)APEC기후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민 생명 · 안전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 (개요) 기획재정부는 3.28.(목)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
 - (배경)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사고⁰¹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목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공공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하고 이러한 가치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 (내용)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난 3.19일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에 국민 생명 · 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논의

-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18.12.21)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18.12~19.4)
 - 발전사, 코레일, 공항공사 등 101개 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시설 22,3만개소를 조사함

01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18.12.4), KTX 강릉선 탈선('18.12.8), 서부발전 청년근로자 사망사고('18.12.11) 등

- 대상 중 노후화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취약시설 7.3만개소⁰² 우선조사하여, 위험 요소 제거 및 예방 2,369건, 보수·보강 1,422건, 점검계획 수립 2,808건 등의 총 6,599건 조치 완료
- 잔여 시설 15만 개소의 조사는 국민안전 대진단과 연계하여 4월말까지 완료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하되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
- (분야별 중점 조사대상) 철도, 도로, 에너지, 항만 분야별 중점 조사대상을 점검함
 - (철도) 시설, 전기, 차량·작업장 3개 분야에 대해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시설물 조사 실시
 - (도로) 노후 교량, 터널 등 시설물, CCTV 등 오작동 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장비 일제 점검
 - (에너지) 발전소, 열수송관 등 주요 작업장, 시설물의 안전 현황, 안전 법령 이행 여부 등 종합 점검
 - (항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부두, 항만 건설공사 현장,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요인 등 점검

〈표 1〉 분야별 중점 조사 대상

대상	조사 내용
철도	시설, 전기, 차량·작업장 3개 분야에 대해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시설물 조사 실시
도로	노후 교량, 터널 등 시설물, CCTV 등 오작동 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장비 일제 점검
에너지	발전소, 열수송관 등 주요 작업장·시설물의 안전 현황, 안전 법령 이행여부 등 종합 점검
항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부두·항만 건설공사 현장,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요인 등 점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3. 28)

- (주요기관별 점검 및 조치 사항)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발전5개사, 4개 항만공사를 점검하고 사안별 조치함

⁰² 발전소, 공항 등 다중복합 시설물 2,645개소, 송전선로, 실험실, 위험물질 저장시설 등 개별시설 6,9만개소, 건설현장 480개소

- (철도공사) 노후화된 168개 시설물과 주요 전기·통신설비, 철도차량 정비체계 등 점검
- (도로공사) 교량, 터널, 비탈면 등 주요 시설물의 소방설비, 누수 여부, 안전법령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18개, 사고가 발생한 고양 열수송관과 동일한 시공 방식을 적용한 지점 443개 점검
- (발전5개사) 26개 발전설비 등 사업장 전체를 시민단체, 민간협회(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공동 조사
- (4개 항만공사) 부두·방파제 등 항만 내 시설물 158개소, 오일허브 부두 건설공사 현장 등 3개소 점검

〈표 2〉 주요기관별 점검 및 조치 사항

주요기관	조치 사항
철도공사	노후화된 168개 시설물과 주요 전기·통신설비, 철도차량 정비체계 등 점검
도로공사	교량, 터널, 비탈면 등 주요 시설물의 소방설비, 누수 여부, 안전법령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18개, 사고가 발생한 고양 열수송관과 동일한 시공방식을 적용한 지점(443개) 점검
발전 5사	26개 발전설비 등 사업장 전체에 대해 시민단체, 민간협회(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공동 조사
4개 항만공사	부두·방파제 등 항만내 시설물 158개소, 오일허브 부두 건설공사 현장 등 3개소 점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3. 28)

- (안전관리 종합대책) 공운위에서는 3.19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⁰³ (관계부처 합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작업장 안전'에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을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함
 - (안전 중심 경영 체계 구축) 전 공공기관이 작업장 안전과 노후 시설물 보강 등의 시설 안전 분야를 포함한 '안전기본계획' 수립, 자체점검 강화 등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

⁰³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 감축을 목표로, ① 기관 경영방식 ②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 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

- (작업장 · 시설 안전) 자체점검 강화 및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험성평가를 추진
- (근로자 안전) 위험 작업장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위험상황 인지 시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운영
- (교육 · 홍보 · 기술개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4·4·4 안전점검의 날」을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정례화하고, 안전관련 신기술을 개발
- (안전관리 중점기관) 전담조직 설치와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를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서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추가한 97개 기관으로 확대
- (경영평가 개편) 경영관리 부문 안전지표의 배점 상향, 안전평가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기관별 안전지표 신설, 안전투자를 평가에 반영하고 관련 부채는 평가 미반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안전점검 자문단 구성 등의 개편
- (임원의 책임 강화) 중대사고 발생에 귀책사유⁰⁴가 있는 기관장, 관련 임원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35조에 따라 해임 · 해임건의 추진,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중대사고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 관련 임원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해임건의 · 요구
- (인력 · 예산 확대)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2019년 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등 총 1,400여명을 증원
 - 안전 예산 및 투자를 공공기관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금년도 안전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5% 이상 확대(2018년 안전예산 집행실적 13.7조 원)되도록 유도할 계획
- (공공계약 개선)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하고 안전 평가를 의무화함

04 기관장 ·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 · 중과실로 불이행하거나 해태하고 이것이 중대사고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관련 비용은 제외하여 계약 체결 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
- (안전 정보 공시 확대) 공공기관의 자발적 안전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공시에 산업재해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

〈표 3〉 안전관리 종합대책

종합대책	세부 조치	
안전관리 강화 방안	안전 중심 경영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경영의 기본원칙 확립 · 안전기본계획 수립
	작업장·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점검 및 개선조치 강화 · 적정 인력 확보 및 투자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 · 작업중지요청제 등 시행
	안전교육, 홍보, 기술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교육, 집중 홍보 실시 · 안전 신기술·제품 개발 및 사용
	안전관리 중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전담조직 설치 · 안전경영위원회, 협의체 운영
관리 체계 개편	안전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평가지표 배점 상향 · 적부평가방식 도입
	임원의 책임 강화	· 중대사고 발생에 귀책사유 있는 임원 해임, 해임건의
	안전 인력 확충 및 투자·예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인력 1,400여명 증원 · 안전 예산 5% 이상 확대
	계약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 공공입찰시 안전평가 강화
	안전 분야 공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수, 재해율 등 · 안전관리 책임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3. 28)

-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제·개정, 산하기관의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 안전 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침을 전파 및 확산할 방침
- (법령·지침 제·개정)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정, 「경영평가 편람」 개정, 「공공기관 경영공시 지침」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개정

- (안전관리 이행 점검) 각 부처는 산하 기관의 '안전기본계획', '안전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을 점검
- (공공기관 전파 및 확산) 4월 중 안전 관련 임원을 대상으로 안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2019.3.28.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0027504&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9.3.28.

* 본 동향은 해당 자료의 내용을 가공하여 재생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①

부처·기관별 추진 과제

추진과제	일정
1. 정부 부처	
① 기재부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정	'19.3
· 경영평가 개편	'19.3
· 기관장 책임 강화	'19.3
· 안전관리 인력 증원	'19.3
· 안전 관련 투자계획 중장기재무계획 반영	'19.6
·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20
· 공공계약 입찰시 안전관리평가 강화	'19.6
· 적격심사 평가시 안전비용 제외	'19.6
· 수의계약 요건 확대	'19.6
· 안전워크숍 개최	'19.4
·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19.4
② 각 부처 공통	
· 안전기본계획 이행 상황 점검	'19~
·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검토	'19~
· 안전 목표관리제 이행상황 점검	'19.4~
2. 공공기관	
① 모든 공공기관(공통)	
· 안전기본계획 수립	'19.5
· 안전관리 규정 수립	'19.5
· 안전업무 적정 인력 확보 및 안전투자 확대	'19.4~
· 공공기관 자체점검 내실화 및 개선조치 이행	'19.3~
· 근로자 필수 안전조치 사항 사전점검 강화	'19.4~
· 직영 작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19.3~
· 도급·발주 작업장 위험성평가 점검	'19.6
·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및 신규직원 단독작업 제한 기준 마련	'19.6
·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도입 및 운영	'19.6
· 내부제안제도 운영	'19.6
· 안전 교육 강화	'19.3~
· 안전점검 집중홍보	'19.3~

추진과제	일정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	
· 안전 전담조직 설치	'19.6
·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	'19.6
· 안전근로협약체 운영	'19.6
·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 확대	'19.3~
· 안전 목표관리제 시행	'19.3~

참고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 [97개]

유형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중복 제외)	97개	33개	40개	24개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32개	<24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대한석탄공사,	<7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개> 국방과학연구소
제5조 제1항 제3호	34개	<13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15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적십자사,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유형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5조 제1항 제4호	48개	<23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1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13개>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립암센터,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과학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제5조 제1항 제5호	28개	<7개> 한국광물자원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21개>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심층동향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현황과 공공기관의 역할

서영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유승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공공기관 지정 제도 운영 현황과 금융감독원 관련 쟁점

정예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현황과 공공기관의 역할

서영빈⁰¹

I. 논의의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이하 'SW') 역량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SW 기술들이 전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창의적·융합적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⁰²
 -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SW 선도기업뿐 아니라 자동차, 금융, 헬스케어와 같은 산업에서도 SW가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⁰³

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ybin@kipf.re.kr)

02 김민석, 「SW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SW교육 현황 및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8-제53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p. 1

03 IT조선, 「SW교육, ① 핵심은 코딩 스킬이 아니라 '컴퓨팅적 사고 능력」, 2016.6.17.일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6/2016061685035.html, 검색일자: 2019.1.2

- 새롭게 강조되는 미래 인재 역량은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창의적 문제 발견 및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에 있음⁰⁴
-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직업의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체제의 변화 필요성을 가져왔으며, 정부는 이에 맞춰 SW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⁰⁵
 - SW 역량은 단순한 컴퓨터의 도구적 활용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술을 익히고 알고리즘적 사고를 체험하여 컴퓨터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해외 주요국은 이미 SW 교육에 대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초·중학교에서 SW 교육 필수화를 추진하는 등의 학교 중심의 SW 교육을 활성화하고, SW에 대한 인식 변화와 문화를 확산하고자 정책을 추진함
 - 해외 주요 국가는 SW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앞서 인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SW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⁰⁶
 - 우리나라도 SW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 중심의 SW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SW 중심 사회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의 SW 교육 필수화를 추진함⁰⁷
- SW 역량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도 SW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SW 교육에 관한 이해와 함께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함

04 김현철,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간담회 자료, 민주연구원, 2018.1.29., p. 3

05 김현철, 상계서, p. 4

06 해외 주요국가의 SW교육 사례는 제II절에서 다루고자 함

07 교육부, 「미래교육의 첫발,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보도자료, 2018.4.2.

II.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해

1. 소프트웨어 교육의 개념과 목적

- SW 교육은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함⁰⁸
 - SW 교육은 코딩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알고리즘 교육 및 컴퓨팅 사고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⁰⁹
 - 교육부는 SW 교육의 기본방향을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으로 제시함¹⁰
 - SW 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정보문화 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 있음¹¹
- SW 교육의 목적은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있음
 - SW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로그래머 양성이 아니라 이를 통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¹²
 - SW 교육운영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³
 - 초등학교는 건전한 정보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체험하여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중학교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08 교육부,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SW) 교육 연수」 교재, 2017.6.

09 이애화, 「국내 소프트웨어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8.6. p. 280, 재인용

10 교육부·미래부,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 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6.12.2.

11 이현정, 「SW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간담회 자료, 민주연구원, 2018.1.29., p. 25

12 「국제신문」, 「SW교육 현재와 미래 <하> SW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18.3.26.,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327.22018009792>, 검색일자: 2019.1.2

13 교육부, 「미래교육의 첫발,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보도자료, 2018.4.2.

- 고등학교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그림 1]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공동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초등학교 (5 또는 6학년)	중학교 (1, 2 또는 3학년)	고등학교 (2 또는 3학년)	
실과	정보	선택과목	전문교과
17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정보	정보과학
체험과 놀이 활동 중심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	선택 과목	
		진로와 연계한 심화된 내용 학습	

자료: 교육부, 「초등예비교원 전체가 소프트웨어 교육 받는다」 보도자료, 2018.3.12.를 활용하여 작성

2. 해외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현황

- 세계 각국은 기존의 ICT 활용을 위한 교육에서 컴퓨팅, 프로그래밍, 컴퓨터과학 교육으로 전환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세계적으로 SW 교육은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컴퓨터 활용능력을 포함한 SW 제작 능력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주고 있음¹⁴
 - SW 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성하거나 의무화하는 등의 관련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는 국가 중 영국, 미국, 중국, 이스라엘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은 2014년 9월부터 컴퓨팅 과목을 만 5~16세인 모든 학년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교사 지원 및 연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¹⁵
 -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연습과정을 통해 정보적 사고, 컴퓨팅 사고력을 습득하고 사회의 문제를 그 관점으로 보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역량에 초점을 둠

14 이애화, 「국내 소프트웨어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8.6, p. 278 재인용

15 현철, 「외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와 시사점」, 『교육개발』, vol. 42, No. 2, 한국교육개발원, 2015, pp. 46-47

- 이전의 ICT 과목은 이미 존재하는 ICT 기술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하고 활용하는 법에 초점을 둠
 - 영국 교육부는 기업 및 영국의 컴퓨터 협회/학회인 BCS(British Computer Society)와 컴퓨터교사 네트워크인 CAS(Computer at School)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사를 지원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함
- 미국은 2016년 1월 모든 학생을 위한 컴퓨터 과학교육 정책을 발표했으며, 워싱턴, 텍사스, 켄터키 등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대신 코딩 과목을 선택함¹⁶
- 오바마 전 대통령은 컴퓨터 사이언스(Computer Science) 과목을 초·중·고교 전 과정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컴퓨터 사이언스 포올(CS for All)’과 같은 교육에 연간 4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으며 관련 지원 정책을 펼침¹⁷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제2외국어를 코딩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아칸소주(州)는 고등학교 컴퓨터 코딩 수업을 의무화하고 수학과목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입법함
- 중국은 필수 교육과정인 ‘종합실천활동’의 한 과목으로 정보교육을 두고 있으며, 해당 과목에서 컴퓨터 과학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수행함¹⁸
-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종합실천활동’ 교과와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과 학교에서 교육부의 관련 요구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
 - 베이징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는 정보기술 과목을 70시간 이수하고, 고등학교는 기술교과 과목을 72시간 이수하며, 여기에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기술 응용, 데이터관리 기술, 인공지능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16 차대길,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노력」, 간담회 자료, 민주연구원, 2018.1.29., p. 97

17 더사이언스타임, 「글로벌 SW교육의 현주소는?」, 2017.11.17.,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8%80%EB%A1%9C%EB%B2%8C-sw%EA%B5%90%EC%9C%A1%EC%9D%98-%ED%98%84%EC%A3%BC%EC%86%8C%EB%8A%94>, 검색일자: 2019.1.2.

18 김현철, 「외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와 시사점」, 『교육개발』, vol. 42, No. 2, 한국교육개발원, 2015, pp. 50-51

- 중국은 컴퓨터과학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중학교 2000년, 고등학교 2003년부터 시행했으며, 디지털 경제에서 중국의 부상이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함
- 이스라엘은 정보기술, 혁신역량, 과학연구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1994년부터 SW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도입하였으며, 고교 졸업자 중 SW를 잘 다룰 수 있는 인재가 매년 1만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¹⁹
 -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SW 교육은 연간 10억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털이 조성돼 스타트업 탄생을 지원하는 ‘창업국가’가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함
 - 이스라엘은 1994년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CS)을 고등학교 정규과목으로 두고, 총 5단계(1단계에 90시간) 교육을 실시함
 - 1~2단계는 컴퓨터 기초, 프로그램과 논리, 3단계는 프로그램 제작 등 실습, 4~5단계는 데이터 처리와 사이버 보안 등 고급과정임
 - 고등학교 한 학년인 10만명 중 약 절반인 5만명가량이 컴퓨터과학을 3단계까지 듣고 이 중 상위 15% 정도가 5단계까지 듣게 되며, 그 결과 고교 졸업자 중 SW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인재가 매년 1만명 이상 배출되어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수행할 수 있음

〈표 1〉 해외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례

국가	주요내용	국가	주요내용
미국	· 워싱턴, 텍사스, 캔터키 등은 고등학교 제2외국어 대신 코딩과목을 선택	중국	· 의무교육과정 중 필수 교육과정인 ‘종합실천활동’의 한 과목으로 정보 교육을 포함
영국	· 2014.9월부터 초·중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SW 필수 교육 포함	이스라엘	· 1994년부터 SW과목을 정규과목에 포함

출처: 교육부 · 미래부 보도자료(2015.7.21.) 및 김현철 「외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와 시사점」, 201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9 김현철, 상계서, pp. 48-49

Ⅲ.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 현황²⁰

- 우리나라는 2014년에 SW 중심 사회를 선포한 이후 SW 교육 관련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 정부 또한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원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함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SW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과도 SW 교육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15년에 SW 교육 운영지침을 발표하였고, 공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SW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는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 이상을 SW 관련 교과로 필수 편성함²¹
 - 초·중등 SW 교육 필수화를 통한 교육 확산과 함께 대학의 SW 교육 혁신, 민간과의 협력 확대, SW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1. 초·중등 SW 교육 확산

-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초·중학교에서 필수화되는 SW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사의 SW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함
 - 초등 현직교사와 중등 '정보'교과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표 2>와 같이 시행함
 - 2020년 2월까지 신규 선발, 복수 전공 연수 등을 통해 총 600여명을 총원하고 초등교사 6만명(30%)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함
 - 중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 SW 교육 전공 교사를 1,351개교에 배치하도록 하고²², 2018년까지 정보·컴퓨터 관련 자격을 소지한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함

²⁰ 교육부·미래부 보도자료(2015.7.21.) 및 교육부 보도자료(2018.4.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²¹ 교육부·미래부,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6.12.2.

²² 2018.10월 기준, 2019년 SW 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2,677곳 중에 정보담당 교사가 배치될 학교는 1,377곳임

- 교원양성대학의 기본이수과목을 개정하여 교육대와 사범대의 관련학과 교육과정
에 SW 교육을 강화하고, 2018년에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SW 강화 지
원 사업(SWEET)을 신규로 실시함²³

〈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교육 연수과정

구분	원격연수	심화연수(집합)	전문연수(집합)
목적/내용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기본소양 함양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교수·학습방법 학습	교원 지도역량을 갖춘 강사교원 양성
교육시간	15시간	15시간	30시간
운영횟수	연6회(5~7월, 9~11월)	연2회(1월, 7월)	연1회(10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8.1.18.), 「학교 소프트웨어 필수교육, 가르칠 준비 착착 진행 중」

- 문제 해결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개발하고 학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를 개발함
 -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모듈형 워크북을 개발하여 보급함
 - 블럭형 코딩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확대함
 - 교과서는 초·중학교용 기초과정 보조교재의 경우 교육부에서, 고등학교용 심화·융합 보조교재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함
- 컴퓨터실과 PC 등 물적 인프라를 확보하여 SW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을 조성함
 - 컴퓨터, 통신망 등 학교 인프라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미진한 지역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확보방안을 마련함²⁴

²³ SW 교육 강화 지원 사업(SWEET)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

²⁴ 2018년 2월에는 서울교육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교육과 3D프린팅 활용 메이커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서울교육청, 「서울교육청-과기정통부, 창의·융합 인재양성 협력 강화」, 보도자료, 2018.2.13.)

- 컴퓨터실과 학생용 컴퓨터를 완비하고, 교구 활용 실습을 위한 예산(교당 300만원 이내)을 지원하며, 지역 내에 지원(체험) 센터를 구축함²⁵
- SW 교육과 관련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도·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함
- SW 교육 선도교육청과 우수학교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일반학교에도 SW 교육을 확산함
 - SW 운영 선도교육청을 지정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SW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교육청, 대학·민간 기업 간 MOU를 체결하여 해당 지역 전체 초·중학교에 SW 교육을 실시함
 - 정규교과·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 학교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함
 - SW 교육 연구·선도학교²⁶는 우수 교육 사례를 인근학교 등에 확산함으로써 지역 내 SW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²⁷
 - 2015년에 228개교를 시작으로 2016년 900개교, 2017년 1,200개교, 2018년에는 1,641개교(초 940, 중 456, 고 245)로 SW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함
 - SW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교과 수업 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봉사, 진로 활동), 자유학기, 학생 동아리, 방과 후 학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SW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16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SW 분야의 진로 교육을 강화함²⁸
 - SW 동아리를 지원하여 학교 내 활동을 통해 자기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2020년에는 '1학교 1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임

25 2018년 12월에 부산, 경남, 인천 교육청에 개소를 마쳤고, 모든 시도에 1개씩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전남 등 8개 교육청에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음(뉴스원, 2018.12.20., <http://news1.kr/articles/?3505555>, 검색일자: 2019.1.2.)

26 SW교육 연구·선도학교란 학교의 정규교과와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SW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를 의미함

27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학교 확대로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모델 확산」 보도자료, 2018.3.12.

2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SW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SW 우수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SW 마이스티고, 영재 교육 등을 지원함
 - 산학협력 기반의 SW 몰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우수기업의 취업을 지원하는 SW 마이스티고를 확대 지정하도록 추진함²⁹
 -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집중교육(5년)을 실시하고 이를 취업까지 연계하는 Uni-Tech 사업단에 정보통신분야의 선정을 추진함
 - 정보·과학 영재교육원, 시·도별 정보영재학급, 과학고·영재고의 SW 교육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함
 - SW 융합 교과중점학교의 단계적 확대, 일반고의 SW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SW 교육을 강화함

2. 대학 SW 교육 혁신

- 대학 내 설치된 교양교육을 통해 SW 기초교육을 확대하고, 인문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융합교육을 유도함
 -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비전공자 대상 SW 기초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SW 복수전공 등을 활성화함
 - 인문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출할 분야에 필요한 특화된 SW 이해 교육과 기초 코딩교육 등을 실시함

- 대학 특성화와 프로그래밍 교육 확대 등을 통해 SW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공교육을 강화함
 - SW 분야의 대학 특성화를 통해 SW 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특화된 인재를 양성함
 - ‘공학교육인증’을 받는 대학의 비율을 확대하여 공과대학 졸업생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제고함

²⁹ 2018년 기준 SW마이스티고는 전국에 3개(대덕SW마이스티고, 대구SW고, 광주SW마이스티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함

- 한·미 연수(WEST) 프로그램,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등에서 해외 인턴을 선발하는 경우, SW 분야의 전공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방안을 검토함
- SW 중심대학³⁰을 선정하고,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차원의 교육혁신을 지원함
 - SW 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신규학과 신설, 유사학과 통폐합 등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학과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함
 - 해외 선진 기업이나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 인턴십·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전적인 영어교육을 대폭 강화함
 - 인문·사회 등 타 계열 신입생들을 위한 SW 기초교육과 심화과정을 희망하는 비전공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학별 특화된 SW 융합교육과정(연계 또는 복수전공)을 의무적으로 운영함

3. 민관 협력 및 소프트웨어 교육 홍보 강화

- 민관합동 SW 교육위원회, SW 교육지원단을 운영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민관합동 SW 교육위원회를 운영하여 과제별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광역별 대학·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SW 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초·중·고등학교의 SW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을 실시함
- SW 분야의 성공사례나 SW 교육원리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여 SW 홍보를 추진함
 -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SW 분야에서 성공한 CEO 이야기를 드라마 형식의 다큐로 제작·방영하여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함

³⁰ SW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혁신하여 학생·기업·사회의 SW경쟁력을 강화하고, SW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대학을 의미하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함 (2015년 8개 대학을 시작으로 총 30개 대학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SW의 중요성과 원리 등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방영함

- SW 교육 관련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개최함
 -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행사로 SW 창의캠프를 운영함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교육 필수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SW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음³¹
 - 2018 SW 교육 페스티벌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나! SW 교육’을 주제로, 쉽고 재미있게 SW 교육을 체험해보고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34개의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 밖에도 양질의 무료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SW를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제작한 각종 SW 교육 자료를 이용하고 SW를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에듀넷(www.edunet.net)과 SW중심사회 포털(www.software.kr)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
 - 2018년에는 SW 교육의 날(2018.10.10일), 온라인 코딩파티(2018.6월, 2018.10월), EBS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였음

31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개최」 보도자료, 2018.10.11.

[그림 2]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의 기대효과



주: 교육부·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5.7.21),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소프트웨어(SW) 교육 청사진 나왔다」

IV.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공공기관의 역할

1. 개요

- SW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SW 교육 정책 지원, SW 인재 양성, SW 콘텐츠 개발, SW 문화 확산 및 홍보 등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SW 교육 관련 공공기관에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의 기관³²이 있음
 - 각 기관의 주요 기능·역할과 SW 교육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음

32 이 밖에도 SW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음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³³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건강한 SW 산업생태계 육성, SW 융합을 통한 사회 혁신, 국가 SW 통계체계의 고도화, 개방형 SW 정책연구플랫폼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함
 - SW 교육에 관한 역할을 살펴보면 SW 포털사이트를 통해 SW 교육 자료를 제공 및 확산하고, SW 교육 콘텐츠 개발, 대학-기업 간의 네트워크 지원 등을 수행함
 - 부설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SW 관련된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국책연구소로, SW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무 교육 정책 및 기반 마련, SW 교재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SW 중심사회 포털사이트(www.software.kr)를 운영하여 친(親)SW 문화를 확산하고, SW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며 이용자들이 손쉽게 SW 관련 정보와 자료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SW 교육 및 진로) SW 강의영상 및 SW 교재, 교육나눔 프로그램, SW 교육 선도학교, 해외 SW 교육 헤드라인과 진로 및 직업정보, 자유학기 SW 멘토스, SW 영재학급, SW 마이스터고, SW 중심대학의 정보를 제공함
 - (SW 행사) SW 창의캠프, SW 교육체험주간 행사, SW 산업주간 행사 안내 신청/접수 등의 관련 행사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
 - (SW 정책 및 정보 제공) SW 분야 인재양성·기업·투자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SW 관련 각종 자료(보고서, 간행물 등), 관련 법령, 제품·기업·사업정보 등을 제공함

- SW 체험기반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SW 산업의 선진적 교육 및 SW 인식 개선을 위해 쉽게 접하고 경험·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확산을 지원함
 - SW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W 교육 교구 및 커리큘럼을 수준별, 주제별로 개발하도록 지원함

³³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검색일자: 2019.1.2에 제시된 주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층을 고려한 SW 교육 콘텐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상호 호환성 기반 모듈형 콘텐츠 등의 SW 교육 경험 플랫폼을 구축함
- SW 체험교육 이해당사자(교육기관, 지자체, SW 기업, 시민 등) 간의 교류와 협업의 기회를 제공함
 -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SW 캠프, KOREA SW 교구 활용 SW 교육, 지역 간 연계 체험교육, 대학-중고등학생-일반인 연계 SW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함
- SW 수요기업-대학-연구소의 유기적 연계·협력·협업이 가능한 SW 기업 집적지에 지역별 특화된 SW 융합클러스터(생태계)를 조성함
 - SW 융합클러스터란 SW 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공간 집적지로 SW 수요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협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말함
 - SW 융합 R&D를 기반으로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고 지식혁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함
- SW 인재 양성 및 교육정책과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 산업통계 및 분석 연구, 미래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함
 - SW 교육 체계 연구, SW 교육에 관한 인식 현황, SW 인력의 중장기 전망 등 SW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SW 교육 및 인력 양성과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관련 통계 자료 수집, 컨퍼런스·포럼·세미나 등을 통한 연구 교류 등의 역할도 수행함

3. 한국과학창의재단³⁴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통해 과학문화 대중화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SW 교육에 관한 정책 지원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³⁴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fac.re.kr>, 검색일자: 2019.1.2에 제시된 주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SW 교육 필수화를 대비하여 선도학교 운영, 학교현장 지원, 영재교육, 교육문화 확산 등의 과제를 수행함
 - 예비 교원의 SW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SWEET)을 수행함
- 초·중·고등학교 SW 교육 필수화에 대비해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교원 역량 강화, 교육 교재 개발, 민관협력 등을 수행함
- 우수 SW 교육 모델을 현장에 적용 및 확산하고, 청소년들과 예비교원의 SW 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그룹과 우수인재를 육성함
 - SW 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SW 교육 민관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함
 - 이와 관련해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온라인 SW 교육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2018 온라인 SW 교육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함
 - SW 교육 정책의 기초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교사들의 교육연수를 통해 SW교육방향을 제시하고 교원역량을 강화함
 - 교사들의 SW 교육 전문연수와 심화연수를 개설 및 운영함
 - SW 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과 민관협력에 대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영국컴퓨터협회(British Computer Society, 이하 BCS)와 SW 교육 협력 MOU를 체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영국 초·중등 SW 교육 보조교재 총 9종(12책)을 2015년부터 3종(4책)씩 나눠 번역·출간함³⁵
- 예비 교원의 SW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 SW 교육 강화 지원 사업(SWEET)을 실시하여 SW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함
- SW 교육 강화 지원 사업(SoftWare Education for all Elementary Teachers,

³⁵ 『ZD Net Korea』, 「과학창의재단 “영국 SW교재 시리즈 번역 완간”」, 2018.1.31., <http://www.zdnet.co.kr/view/?no=20180131220510>, 검색일자: 2019.1.2.

SWEET)이란 SW교육 필수화에 따라 모든 예비초등교원들이 필요한 지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초등교원양성대학의 SW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³⁶

- 교육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 해당 사업은 국립초등교원양성대학 12개 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총 23.4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예비교원의 SW 융합교육·참여중심교육의 수업지도역량을 강화함
 - 전체 대학 교원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SW 활용 융합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며 SW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지원함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³⁷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및 학술연구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ICT 융합 미래교육의 R&D 강화, ICT를 통한 융합형 인재양성 사업 등을 통해 SW 교육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 SW 교육에 관한 역할을 수행함
-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SW 교육 운영지침과 교육 교재 개발, SW 교육 선도·연구학교, 로봇활용 실험학교 등을 지원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함
 - SW 교육의 통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함
 - 초·중등학생의 SW 교육 효과성(CT 역량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교원의 SW 역량을 강화하고자 SW 교육 연수를 추진함

³⁶ 교육부, 「초등예비교원 전체가 소프트웨어 교육 받는다」 보도자료, 2018.3.12.

³⁷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검색일자: 2019.1.2에 제시된 주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SW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SW 교육 체험 활동을 제공함
 - ‘꿈을 잇(IT)다 소프트웨어스쿨’을 운영하여 IT, SW 관련 분야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교육용 SW 및 피지컬 컴퓨팅 활동 도구 등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함
 - 해당 프로그램은 중학생들과 권역별 거점 대학을 연계하여 지역별 대학교 교수 및 재학생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SW 교육 뿐 아니라 중학생들의 진로·진학의 고민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해 줌

5.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³⁸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ICT R&D에 관한 기술 개발, 사업, 인력 양성, 성과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SW 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
 - SW 중심대학, SW 마이스터고, SW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및 지정 등의 사업을 통해 SW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
- SW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SW 중심대학 지원, 전문가 멘토링, SW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함
 - SW 중심대학 운영원칙인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SW 교육 과정 개편, 타 전공 지식과 SW 소양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인재 선발 및 교원 평가 개선을 통한 SW 가치 확산 지원에 부합하는 대학을 지원함
 - SW 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SW 마이스터고를 지원하고, 201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W 마이스터고 여름 SW 캠프’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³⁹
 - SW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함

3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https://www.iitp.kr>, 검색일자: 2019.12.에 제시된 주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가 바로 미래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보도자료, 2018.8.9.

V. 결론

- SW 기술들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SW 인재를 키우기 위한 SW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SW 교육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영국, 중국, 미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서도 SW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초중등 SW 교육 의무화, 대학 SW 교육 확대 등 SW 교육의 체계적인 마련과 함께 SW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공교육 중심의 SW 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SW 교육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양성, 교재 개발 등의 교육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함
 - SW 교육은 단순히 코딩을 잘 짜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분석·설계하며, 그것을 프로그램 언어로 코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⁴⁰
 - 기존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과 정보 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컴퓨터의 원리와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SW 분야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SW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인 초중등 SW교육 시스템과 더불어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SW 산업의 인력 수요 반영, 민간과의 협력 등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함

⁴⁰ 유상미, 「[칼럼]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 『네이버레터』, 2015.5.22, <https://nter.naver.com/naverletter/textyle/54757?category=1233>

참고문헌

- 교육부,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SW) 교육 연수』 교재, 2017.6.
- 김민석, 「SW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SW교육 현황 및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이슈리포트』 2018-5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 김현철,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간담회 자료, 민주연구원, 2018.1.29.
- _____, 「외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와 시사점」, 『교육개발』, vol. 42, No. 2, 한국교육개발원, 2015.
- 이애화, 「국내 소프트웨어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8. 6.
- 이현정, 「SW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간담회 자료, 민주연구원, 2018.1.29.
- 차대길,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노력」,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간담회 자료, 민주연구원, 2018.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교 소프트웨어 필수교육, 가르칠 준비 착착 진행 중」 보도자료, 2018.1.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가 바로 미래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보도자료, 2018.8.9.
- 교육부, 「초등예비교원 전체가 소프트웨어 교육 받는다」 보도자료, 2018.3.12.
- 교육부, 「미래교육의 첫발,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보도자료, 2018.4.2.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학교 확대로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모델 확산」 보도자료, 2018.3.12.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개최」 보도자료, 2018.10.11.
- 교육부·미래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소프트웨어(SW) 교육 청사진 나왔다」 보도자료, 2015.7.21.

- 교육부·미래부,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 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6.12.2.
- 서울교육청, 「서울교육청-과기정통부, 창의·융합 인재양성 협력 강화」 보도자료, 2018.2.13.
- 『국제신문』, 「SW교육 현재와 미래 <하> SW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18.3.26.,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327,22018009792>, 검색일자: 2019.1.2.
- 『네이버레터』, 유상미, 「[칼럼]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 2015.5.22., <https://nter.naver.com/naverletter/textyle/54757?category=1233>, 검색일자: 2019.1.2
- 『뉴스원』, 「SW교육 필수화 시행 원년, 학생 95% “창의적 사고에 도움”」 2018.12.20.,
<http://news1.kr/articles/?3505555>, 검색일자: 2019.1.2.
- 『사이언스타임즈』, 「글로벌 SW교육의 현주소는?」, 2017.11.17.,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8%80%EB%A1%9C%EB%B2%8C-sw%EA%B5%90%EC%9C%A1%EC%9D%98-%ED%98%84%EC%A3%BC%EC%86%8C%EB%8A%94>, 검색일자: 2019.1.2.
- 『IT조선』, 「SW교육, ①핵심은 코딩 스킬이 아니라 ‘컴퓨팅적 사고 능력」, 2016.6.17.,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6/2016061685035.html,
 검색일자: 2019.1.2.
- 『ZD Net Korea』, 「과학창의재단 “영국 SW교재 시리즈 번역 완간”」, 2018.1.31., <http://www.zdnet.co.kr/view/?no=20180131220510>, 검색일자: 2019.1.2.
- 소프트웨어중심사회 포털사이트, <http://www.software.kr>, 검색일자: 2019.1.2.
- 에듀넷, <http://www.edunet.net>, 검색일자: 2019.1.2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검색일자: 2019.1.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https://www.iitp.kr>, 검색일자: 2019.1.2.
- 한국과학창의재단, <https://www.kofac.re.kr>, 검색일자: 2019.1.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검색일자: 2019.1.2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유승현⁰¹

I. 서론 및 배경

- 최근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14.4.16.)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최근에는 일산 열배관 파열사고('18.12.5.), 강릉선 KTX 탈선 사고('18.12.8.), 태안발전소 사고('18.12.10.) 등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체로 <불안>하다는 비율이 <안전>하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먹거리, 태풍 및 지진, 화재(산불 포함)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안전>하다는 비율보다 <불안>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yoush@kipf.re.kr)

〈표 1〉 부문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2016년)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계
건축물 및 시설물	1.7	19.0	45.5	27.9	5.9	100.0
교통사고	0.8	9.5	39.4	39.1	11.3	100.0
먹거리	1.5	15.9	41.1	31.9	9.7	100.0
태풍 및 지진	1.6	19.1	43.4	30.1	5.8	100.0
화재(산불 포함)	1.6	17.5	51.7	24.9	4.2	100.0

주: 2016년 조사결과로, 이후 발생한 사건사고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증가하였을 소지가 큼
 자료: 통계청, 「2016 사회인식조사」

-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느끼는 사회 전반의 안전체감도는 2.7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상반기 2.86점에 비해 0.12점이 하락하였음⁰²

 -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는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도 조사로 201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일반국민(전국 13세 이상)과 관련 전문가임
 - 안전체감도 하락 원인으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10월) 등 생활범죄사고와 KT 통신구 화재(11월), 고양시 운수배관 파열·KTX 강릉선 탈선사고(12월) 등 잇따른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으며, 안전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⁰³

 -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 등으로,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이 해당됨⁰⁴

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278>), 검색일자: 2019.2.12.
 0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 개최」, 2018.12.21
 0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8.12.18

-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 건설관리공사, LH 등 10여 개 시설안전 공공기관 전문인력(100여 명 수준)으로 구성하여 점검 요청 시 지원
 - 노후화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등 안전이 취약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각 공공기관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보강 및 교체, 예산 및 인력 확충 계획이 포함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안전’분야는 국가 책임하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예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따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목표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안전 관련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안전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II. 재난의 유형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음⁰⁵

⁰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은 인간의 부주의와 잘못된 기술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성 재난과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난, 산업의 발달에 따라 수반되는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피해가 이에 포함⁰⁶
-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관리의 차원에서 비교할 경우 양자 간의 구체적인 개념 구분이 모호하고 불분명함⁰⁷
- 재난관리의 경우 재난이라는 비상상황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로 비교적 명확한 대상 범위 및 행위주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⁰⁸
 - 반면, 안전관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함으로써 그 정책적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으로서 경제, 산업, 복지, 보건, 과학 기술, 여성 정책 등이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로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행정안전부의 업무 범위가 각 부처의 개별적 안전관리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

0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873>), 검색일자: 201.2.14.

07 이병기·고경훈,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12, pp. 68-84

08 오윤경·정지범,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6.12, p. 17

- 오늘날 많은 나라와 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의 활동과 목표는 총체적 재난관리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CEM)에 기반하고 있음⁰⁹
 - 페탁(William J. Petak)은 재난관리 과정을 재난발생 시점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① 완화와 예방(Mitigation and Prevention) ② 대비와 계획(Preparedness and Planning) ③ 대응(Response) ④ 복구(Recovery)의 4단계로 설명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재난관리 과정은 재난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재난의 발생 시점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4가지 과정은 상호 단절된 과정이 아니라 상호 순환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앞의 두 단계는 재난발생 이전 단계이고, 뒤의 두 단계는 재난발생 이후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는 재난관리, 안전관리를 공통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세분화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¹⁰
 -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3에 따르면, 재난관리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단계별 활동을 의미
 - 재난관리란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으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완화, 준비계획, 응급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¹¹
 -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4에 따르면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

09 송창영, 『은평구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2012, pp. 2-16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1 송창영, 『은평구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2012, pp. 2-16

- 안전관리는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를 망리하는 포괄적 개념이며, 구조, 구난 및 수습, 복구 등 사후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음¹²

[그림 1] 재난관리 단계의 흐름도



출처: 송창영, 『은평구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2012.

Ⅲ.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방향¹³

-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¹⁴가 출범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함¹⁵

12 이병기 · 고경훈,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12, pp. 68-84

13 최호진,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과제, 생협평론, 2018.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7810#09T0>, 검색일자: 2019.2.14.

14 2017.7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었음

15 오윤경 외 3인,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성 · 효과성 평가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12, p.3

-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고였으며, 이를 계기로 재난안전 관련 법제도부터 안전의식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요구됨
 - 2014년 11월, 안전행정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 해경을 통합해 안전 업무만을 전담하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게 됨
 - 당시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며 재난안전관리 전 분야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중장기적 혁신을 추진함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난안전분야 예산·조직 등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과관리 및 범부처 차원의 조정과 협의 중요성이 강조됨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후 발생한 대형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¹⁶
- 2017년 6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소방과 해경, 안전기능을 포괄했던 국민안전처의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고, 소방업무는 ‘소방청’으로 분리되었으며, 해양 사무 중 경비, 안전, 오염방제, 해상사건 수사기능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재정적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함
 - 「재난안전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과정을 거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 검토 결과 ④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16 연합뉴스, 「정부조직개편」 세월호 참사로 탄생한 안전처 2년 반 만에 간판 내려, 2017.6.5.
<https://www.yna.co.kr/view/AKR20170605080100004>, 검색일자: 2019.2.13.

-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대 국정 전략 중 재난관리체계를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과제에 포함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계획, 국민의 정책 제안을 종합하고 국내외의 상황, 국가발전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과제 및 계획을 담아 수립¹⁷
 -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제시하였음
 - 문재인 정부는 이 과제를 통해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20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안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토록 함
 - 20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등을 추진

-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해경 등 현장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사후조사·치료를 강화할 방침
 -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와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강화
 -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과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체계 고도화 등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완비할 예정

IV. 재난 및 안전관리 공공기관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102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중앙 공공기관은 총 45개에 해당됨

¹⁷ 『안전신문』, 「문재인 정부 안전부문 국정과제 어떤 내용 담겼나」, 2017.7.26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16>, 검색일자: 2019.2.13.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을 의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기본법」 4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각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의무와 역할을 명시

〈표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리단계별 역할

관리단계 구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법적 역할
예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 · 이용에 관한 체계 구축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 ·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 재난방지시설의 점검 및 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
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 및 활용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대응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관계법령이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요청, 실시하는 응급조치 사항에 대한 협력 · 재난관련 위험정보 통보 ·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 재난상황시 응급조치 및 협조
복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결과통보 ·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자체복구계획 수립, 시행 · 재난복구 시행

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조항별 내용을 표로 재정리

-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중앙 공공기관은 총 14개임
 - 「기본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까지 모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범위에 포함
 - 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를 통해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고시하는 기관 가운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중합유원시설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소방안전원은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은 기본법 및 시행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80조(업무의 위탁), 기관 현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등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
 -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 수립, 안전관리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 등 사전적 예방 및 대비
 - 주요 기관 설립법 및 관련법 등을 통해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대부분 안전관리 및 검사, 점검, 정밀진단 및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②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한국시설안전공단: ①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②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공유 ③ 건설공사 안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①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②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표 3〉 재난 및 안전관리법 관련 공공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시행령 별표1의2)(개정 2019.1.15.)		
- 한국철도공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서부발전(주)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남부발전(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동서발전(주)
- 한국가스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원자력연구원	- 여수광양항만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전력공사	- 대한적십자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석유공사	- 독립기념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예술의전당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부산항만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인천항만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관광공사	- 울산항만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마사회	- 해양환경공단
- 한국공항공사	- 한국남동발전(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국립공원공단	- 한국중부발전(주)	- 주식회사 에스알
안전관리전문기관(시행령 제40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교통안전공단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도로교통공단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 굵게 처리된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안전관리전문기관임(7개 기관)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 기타 법령 및 위임위탁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공공기관을 관련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거·시설안전, 교통·항공, 선박·항만, 의약품, 에너지,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관리 또는 안전검사·검증 기능을 제공
 - 분야별 기관으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 한국환경공단(화학물질), 환경산업기술원(화학제품), 안전성평가연구소(주거·시설) 등이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 역할, 수행 업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설립법 및 위임위탁규정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4〉 안전관련 분야별/법적 지위별 공공기관 현황(2018년 기준)

분야	법적지위	기관명
교통·항공	재난관리책임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도로교통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타	항공안전기술원
사이버안전	기타	한국인터넷진흥원
에너지·원자력·수자원	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식의약품	재난관리책임기관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적십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타	식품안전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거·시설안전	재난관리책임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	안전성평가연구소
선박·항만	재난관리책임기관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환경	재난관리책임기관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기타	환경산업기술원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	독립기념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의전당,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을 정리. 이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기관 사업을 기준으로 분야별로 저자가 구분·정리하였음

V.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의 주요 쟁점

- 그간의 정부 대책은 상황관리 및 사후적 대응, 복구 등 수습대책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¹⁸
 - 정부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시설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하였음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200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루사와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등의 재난 발생에 따라 법령 제정이 추진되었음
 - 이처럼 우리나라는 특정 재난사고 및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이를 수습하는 단계에서 사후적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왔음
 -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건을 통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통신 및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적 예방 및 안전관리 노력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음

- 재난안전 관련 법률 및 추진체계가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민간 간, 안전관련 공공기관 간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가 미흡한 상황임^{19 20}
 -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재해예방' 및 '국민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분야별 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됨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체계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존재²¹

18 관계부처 합동, 「국민안전 종합대책」, 2013.5

19 김용성 외 6인,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 2018.9, p.2

20 나체준 외 3인, 「재난·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12, p.30

21 김찬오, 「국가안전 추진방향 모색」, 한국능률협회 공공안전경영 특별 세미나 주제발표 자료, 2019.3, p.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서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 조항이 있으나, 국가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 및 조정하는 기능이 취약
- 분야별 개별법의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시스템적 안전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 및 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그림 2] 현행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체계



자료: 김진오, 「국가안전 추진방향 모색」, 한국능률협회 공공안전경영 특별 세미나 주제발표 자료(2019)의 그림 재인용

- 과거 정부 주도의 통일적·체계적인 명령과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난 대응방식은 위험의 심각성이 예측 가능하고, 소규모의 단순 재난인 경우에 한해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라고 볼 수 있음²²

22 이훈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4), 경인행정학회, 2015.12, pp. 127-150

-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교육부 등 유관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 실패로 혼란에 빠진 경험을 하였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서 조직 간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조직들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부족, 정보의 신속한 공유 미흡, 공공부문 간 협력체계 미흡 그리고 재난대응의 세부적인 조정방안 미비 등으로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효율적 재난관리가 힘든 실정임
- (구)국민안전처 체제하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주체별·유형별·단계별로 재난안전관리 역량과 전문성 부족, 인력보강 등의 한계로 인해 유기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음²³
-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 교육훈련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성과 역량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²⁴
 - 전국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재난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²⁵
 -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투자 및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
 - 재난안전예산은 2014년 12.4조원(3.5%), 2015년 14.7조원(3.9%), 2016년 14.6조원(3.8%), 2017년 14.3조원(3.6%)으로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재난안전 R&D 예산은 7,890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19조 4,371억원)의 4%에 불과한 상황

23 이환범 외 2인,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국민안전처 용역보고서, 2017.5, pp. 44-54

24 김용성 외 6인,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 2018.9, p. 2

25 이병기·고경훈,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12, pp. 68-84

- 재난안전 사건 및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비, 대응하고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²⁶

Ⅵ.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후적인 대응, 복구 중심이 아닌 사전적 예방, 대비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주요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사고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며, 안전 관련 공공기관은 법적·제도적 관리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기관이 담당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평시 점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²⁷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 예방 차원에서는 재난대응 조직 구성, 재난 예측정보 제공,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재난방지시설의 점검 및 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대비 단계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안전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을 토대로 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요소 검토 및 분석 등의 노력과 함께 대비 차원에서는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유지를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
 -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조직과 협력조직의 역할,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²⁸

26 윤건·류총렬,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및 관리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4.12, p. 3

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 개최」, 2018.12.2

28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제2장 제19조(책임과 역할)에서는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

- 재난 발생 후 복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1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음²⁹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보유 시설에 대해 화재, 추락 등의 위험요인을 지난 12월부터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을 보유한 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이 작업방식과 환경, 매뉴얼, 인력배치와 시설, 장비의 운영 등 포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업무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시설점검, 안전진단, R&D, 안전관리 기준 마련, 교육 홍보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도록 함
 - 재난관리에서 협력이란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을 의미³⁰
 - 이러한 협력은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부문, 민간과 민간 간의 협력 모두를 포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기준으로 편제와 기능을 체계화하고 있음

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공공기관, 안전 중심으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 다짐」, 2019.1.17

30 김영주 · 문명재, 「재난관리 조직의 협력수준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9, p. 83~116

- 재난대응 관련 업무의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며, 실제 재난현장에서 소방, 경찰 또는 해양경찰, 군,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공공기관 및 지사, 민간부문(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간 긴밀한 연계와 협업은 재난관리의 성패를 좌우
- 특히, 재난발생 시 대응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2차 대응기관으로 가장 먼저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소방, 1차 대응기관(지자체 재난 관련 부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공공기관의 경우, 상호 간의 지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 협력이 가능
 - 재난관리는 둘 이상의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다조직적(multi-organizational)인 특징을 가지며, 업무범위가 여러 조직에 중첩되어 있어 유관기관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재난안전관리의 각 단계별 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관련 전문지식, 경험, 협력 및 소통능력,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판단능력 등의 역량과 능력을 갖추 필요 있음
 - 건설, 식품, 소방, 의료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며, 해당 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 차원에서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ata base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VII. 결론

-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 및 지자체는 물론이고,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음

-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문화를 유지해왔던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정치문화와 국민의 의식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왔음
 - 그러나,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황관리, 구호, 의료, 방역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³¹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중심 및 현장중심의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음

- 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관련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재난이 발생하기 전 평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안전관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
 - 사전적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활용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관 자체적인 경력관리가 필요함

31 이환범 외 2인,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국민안전처 용역보고서, 2017.5, pp. 44-54

참고문헌

- 김영주·문명재, 「재난관리 조직의 협력수준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9.
- 김용성 외 6인,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 2018.9.
- 김찬오, 「국가안전 추진방향 모색」, 한국능률협회 공공안전경영 특별 세미나 주제발표 자료, 2019.3.
- 나채준 외 3인, 「재난·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12.
- 송창영, 『은평구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등을 위한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화 방안 연구』,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2012.
- 오윤경·정지범,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6.12, P.17
- 오윤경 외 3인,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성·효과성 평가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12.
- 윤 건·류충렬,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및 관리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4.12.
- 이병기·고경훈,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12.
- 이환범 외 2인,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국민안전처 용역보고서, 2017.5.
- 이훈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4), 경인행정학회, 2015.12.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 개최」, 2018.12.21.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23019&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검색일자: 2019.2.15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8.12.18.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3019&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9.2.15.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공공기관, 안전 중심으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 다짐」, 2019.1.17.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1264&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안전 중심으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 다짐](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1264&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안전%20중심으로의%20경영%20패러다임%20전환%20다짐), 검색일자: 2019.2.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하반기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74점」, 2019.1.29.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278> 검색일자: 2019.2.12
- 연합뉴스, 「정부조직개편」 세월호 참사로 탄생한 안전처 2년 반만에 간판 내려」, 2017.6.5. <https://www.yna.co.kr/view/AKR20170605080100004> 검색일자 : 2019.2.13
- 안전신문, 「문재인 정부 안전부문 국정과제 어떤 내용 담겼나」, 2017.07.26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16>, 검색일자: 2019.2.13
- 프레스리안,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2018.6.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97810#09T0> 검색일자: 2019.2.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873>), 검색일자: 2019.2.14.

공공기관 지정 제도 운영 현황과 금융감독원 관련 쟁점⁰¹

정예슬⁰²

I. 서론 및 배경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2019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내림
 -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정 찬성 의견과 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지정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섬⁰³
 -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에 예산과 인건비 등을 보고하고 경영평가를 받아야 함

01 본고에서 정리한 쟁점사항은 관련 연구보고서 및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저자 및 기관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힘

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yschung@kipf.re.kr)

03 조선비즈, 「금융감독원 공공기관行 다시 불붙나」(2018.12.19.), 더벨,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1년 더 유예?」(2019.1.24.)

- 공운위는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비효율적 운영 개선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보고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지정 유보' 결정을 내림⁰⁴

-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재정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지 않으며 업무 특성상 독립성을 살려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⁰⁵
 - 그러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내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금융감독원이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8년부터 공공기관과 동일한 경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⁰⁶
 -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공기관이 되는 순간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관치 금융'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함⁰⁷

- 채용비리와 고액 연봉자의 인력 과잉 등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자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나 반발이 커 조건부로 철회함
 -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와 채용비리 개선, 금융위의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구조 개편 등 네 가지 지정 유보조건을 제시했는데 유보조건 이행 여부가 2019년 지정 여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⁰⁸

04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2019.1.30.)

05 이데일리, 「윤석현, 삼성생명 종합검사 대상...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안될 것」(2019.1.18.)

06 매일일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또 수면위로」(2019.1.20.)

07 뉴시스, 「공공기관 지정 안된다는 금융감독원...명분은」(2019.1.22.)

08 비즈니스포스트, 「홍남기, 금융감독원은 3급 이상 간부의 비중을 35% 이하로 줄여야」(2019.1.23.)

- 2019년 지정 여부 결정 시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이 지정 유보조건 대부분을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1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결정함⁰⁹
-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변화되는 금융감독원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봄
 -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쟁점을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를 정리하고 또 하나의 변수인 금융체계 개편과 관련된 이슈를 함께 정리하고자 함

II. 공공기관 지정 제도 운영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¹⁰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기획재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매년 1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그 유형을 구분함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개별 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 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⁰⁹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2019.1.30.)

¹⁰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을 바탕으로 작성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통적으로 동법 제11조의 경영공시, 제12조의 통합공시, 제13조의 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조사, 제14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그리고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 등의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공통된 관리·감독대상이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 비해 기관 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되고 주무부처의 재량적 관리가 용이한 편임

-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고 이외 나머지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구분기준 및 방식은 「공운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및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자체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함
 -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세분함
 -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세분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직원정원이 50인 미만인 공공기관
 -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

〈표 1〉 공공기관 유형 분류

유형구분	지정요건
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준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회원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정원 50인 미만인 공공기관과 이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주: 연구개발 목적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분류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개정을 통해 마련됨(2018.3.27. 개정법률)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8

2. 2019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¹¹⁾

- 신설기관 및 지정요건 충족기관은 신규지정, 유형별 지정요건 등이 변화한 기관을 변경 지정 또는 지정해제 추진, 지정유보는 공운위 의결을 거친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소규모 기관 판단기준 상향 및 단순위탁 자회사 추가

11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2019.1.30.)」 발췌

- 지정유보기준(18): 소규모기관, 일시적 지분보유기관, 제한적 지배력 보유, 독립성 확보 필요기관, 예술창작법인, 민간경쟁 자회사, 독립적 운영이 필요한 교육기관, 한시적 조직, 조건부 유예
- 경제규모 확대, 공공부문 인력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정유보 기준 중 소규모기관 판단기준 상향

〈표 2〉 공공기관 유형 분류

현행	수정
① 총수입액 20억원 미만 또는, ② 직원 정원 20인 미만 또는, ③ 총수입액 40억원 미만이고 직원 정원 30인 미만 * 본부 인력이 20인 미만 등 실질적인 소규모기관 포함	① 총수입액 30억원 미만 또는, ② 직원 정원 30인 미만 또는, ③ 총수입액 50억원 미만이고 직원 정원 40인 미만 * 본부 인력이 20인 미만 등 실질적인 소규모기관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8

- 지정유보 기준에 단순위탁 자회사 신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는 모회사 위탁업무만을 수행하며 주요업무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이므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 실익 낮음
 - * 단순위탁 자회사 요건: ① 모회사 지분을 100%, ② 모회사 위탁업무만 수행, ④ 주요업무가 단순노무(미화, 경비, 시설관리, 콜센터 운영 등)
- 연구개발 목적기관 별도 구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8.3월)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내에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별도 구분 지정
 -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그 밖의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공운위에서 정하는 기관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지정 가능

- 2018년도 지정 시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 지정 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 조건부 지정 유보로 결정됨
 - 지정 유보 조건은 ①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②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③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④ 엄격한 경영평가 등임
 - 2018년도 유보 조건 이행실적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등의 유보조건은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
 - 2018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운영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 예산과 기관 운영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함
 -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추천인사를 외부통제 과정에 참여시켜 성과평가를 개선하기로 함

- 다만,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중 상위직급 비율 감축은 금융감독원이 향후 5년간 35% 수준으로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2월 총 15개 팀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단행함¹²
 - 검사·조사부서팀을 18개 줄이는 대신 디지털금융감독팀, 투자금융팀 등 3개 팀이 새로 만들어짐
 -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팀장 직위 축소를 위한 '팀 통폐합'이 핵심으로 금융감독원이 2018년 18개 팀을 줄인데 이어 올해에도 15개 팀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2년간 줄어든 직위 수는 34개임

¹² 서울신문,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융감독원 15개팀 감축...포용금융실 신설」(2019.2.8.)

Ⅲ.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관련 쟁점

1.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찬성 vs 반대

-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본격화됨¹³
 - 이후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반대로 지난해 1월 최종적으로 지정 유보된 바 있음
 - 기획재정부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포기하는 대신 경영공시, 채용비리 개선, 엄격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을 지정 철회조건으로 내세워 1년 뒤 이행결과를 보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고 결정함

- 금융감독원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독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함¹⁴
 - 현재는 예산과 업무를 금융위에서 같이 통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은 기획재정부, 업무는 금융위로부터 관리받아야 하는데 이미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상위기관만 늘어나 업무의 자율성 및 독립성만 더욱 침해될 것이란 우려
 - 지정 반대에 대한 반론으로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미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이 금융위 감독과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동시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금융감독원만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침해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

13 서울경제, 「기획재정부-금융위-금융감독원 또 3각 갈등」(2019.1.17.)

14 뉴시스, 「공공기관 지정 안된다는 금융감독원..명분은?」(2019.1.22.)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경영공시, 고객만족도조사 등의 부문에서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인력과 조직, 예산, 경영평가 등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서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¹⁵

○ 해당 법안은 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꿔 금융감독원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기재위의 통제 아래 두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함

○ 당시 정무위와 금융위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변경되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금융위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상황이었음

○ 정무위와 금융위는 기재위에 해당 법안 논의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무위 주도의 법안으로 대체됨

○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8년 1월 당시 검토 중이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및 관리금융의 폐해가 야기되는 등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¹⁶

○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편성, 기관혁신 등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며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가 이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임

- 위와 같은 정부 통제수단의 도입은 금융감독업무에 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제통화기금(IMF),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가 권고한

¹⁵ 조선비즈, 「금융위 vs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예산권 기싸움 일단락...금융위내 관리팀 신설키로」(2018.1.4.)

¹⁶ MK뉴스, 「금융감독원 개혁 기대하던 기획재정부...금융위 반격에 뒤통수」(2018.2.1.)

-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또한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강화된 외부통제장치와 중복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함
 - 2017년 12월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 예·결산서의 국회 보고, 분담금 관리위원회 신설 등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를 새로 도입한 내용이 담겨짐
- 2018년 9월 감사원은 금융위의 예산지침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당시 금융감독원의 방만경영을 언급하며 그 원인을 금융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함¹⁷
- 당시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직·정원·예산을 확대할 경우 다양한 통제 및 경제장치가 있는 데 반해 민간기구 형태인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러한 경제장치가 미흡하며 정부조직처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민간조직처럼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함¹⁸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서 받고 있는 감독분담금이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 13.6%씩 늘어 과도하고 상위직급이 지나치게 많아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임
 - 감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이 받는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함
 -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통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두 기관은 부담금 지정을 반대했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의 저지로 부담금 지정을 무산시킴

17 노컷뉴스, 「초상집 된 금융감독원...역대급 감사 결과에 침통(2017.9.20.)」, 아시아경제, 「금융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뜯어본다」(2018.11.13.), 연합뉴스, 「방만경영 금융감독원 통제강화 어떻게...금융·예산당국 국회서 격돌」(2017.11.19.)

18 서울이코노미뉴스, 「금융감독원 감사원감사 후폭풍...무소불위 권한 줄이고 법적 근거 만들어라 비난 이어져」(2017.9.21.)

- 금융위는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음¹⁹
 - 금융위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요구에 대해 매년 지속되는 논쟁을 방지하고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함
 -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은 2018년 1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을 공공기관 지정 불가 기관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함
 - 현재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불가 기관은 상호부조 기관, 지방자치단체 설립 기관, KBS, EBS로 한정되어 있는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도 포함하겠다는 것임
 - 박 의원은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핵심적인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2.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논의

-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이를 둘러싼 기관 간의 정치적 관계 이외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보다 큰 제도적 변화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본 장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함
 -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역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함

가.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역할²⁰

- 금융감독원은 1999년 1월 2일 금융부문별 감독기관이었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임

¹⁹ K뉴스, 「금융감독원 개혁 기대하던 기획재정부...금융위 반격에 뒤통수」(2018.2.1.)

²⁰ 금융감독원(2015, p. 36)과 방영민(2010, p. 30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금융감독원의 설립목적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는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임
- 금융감독원이 설립되기 이전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 별로 분산되어 있었음
- 동일 금융권역 내에서도 해당 감독기관과 재정경제부(구 재무부 또는 재정경제원을 포괄) 간에 감독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었음
 - 즉, 은행권역의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과 재정경제부, 증권권역의 경우 증권감독원과 재정경제부, 보험권역의 경우 보험감독원과 재정경제부가 각각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
 - 1970년대 이후 설립된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재정경제부가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면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에 검사업무를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였음
-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회사 업무가 겸업화·다양화되고, 금융산업의 대외개방, 세계화가 촉진되는 등 금융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파생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한 은행, 증권, 보험 상품의 성격을 내포하는 신종 금융거래가 더욱 확대됨
-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원적인 금융감독체계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
 - 금융 개방화 및 겸업화 추세와 금융 불안정성의 심화에 대비하여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여 일원화

- 거시경제정책 및 통화신용정책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금융감독기구 설립
- 관련 기관 간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고 상호협력 강화
-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간으로 금융개혁법안을 1997년 8월 마련함
 - 이후 IMF의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 권고안을 받아들여 1997년 12월 29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의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통합이 본격화 됨
 - 4개 감독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금융권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겸업화 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형태 구성을 목표로 조직설립에 박차를 가한 결과 1999년 1월 2일 마침내 금융감독원이 설립됨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을 크게 구분하면 시스템 감독, 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의 건전성, 자본 적정성 및 각종 건전성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
 -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公示), 정직, 성실 및 공정한 영업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임
 - 금융회사 검사는 금융회사의 현장에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임점검사(on-site examination)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근거한 상시감시를 병행함
 - 또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나 보험사기 조사업무도 수행함
 - 금융감독원은 이밖에도 소비자가 직접 제기하는 민원의 상담, 조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하여 금융소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쟁점²¹

-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함
 - 1998년 4월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설립되었으나 금감위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9인의 소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였음
 - 뒤이어 1999년 1월 옛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설립됨으로써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정책을 만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감위·금융감독원 3원 체제가 됨(금감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직)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을 집행하면서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한 감독규정 개정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
 - 감독규정 개정은 금감위의 권한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이 개정안을 내놓으면 이를 금감위가 채택하는 방식이었음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금감위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기능을 통합해 금융위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감독 체계가 3원화되어 있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임
 - 9인의 공무원 조직으로 시작했던 금감위는 금융위 출범 전까지 약 150명 수준으로 15배가 커졌고, 금융위 출범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인력까지 수용하면서 다시 250명가량으로 늘어남
 - 금융위의 권한은 늘어난 공무원 수가 말해주듯 금융정책부터 감독정책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직이 금지되면서 두 기관의 조율은 사실상 사라짐

21 이코노미조선(2018.7.2), 한국경제매거진(2018. 1. 2.)을 참고하여 작성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금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하반기부터이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임
 - 현재 금융위는 금융산업 진흥을 증진하는 정책과 함께 감독정책을 수립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 정책과 감독 기능을 금융위가 함께 가지고 있음
 - 이 때문에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구'가 아니라 '금융위의 집행기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 왔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12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4개년 계획'에서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은 금융위를 해체하고, 정책 기능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것으로 '금융위-금융감독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체제로 바뀌는 것임

〈표 3〉 정권별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

정권	개편 작업 및 논의		주요 내용
김영삼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금융개혁위원회안)	1997년	· 통합 감독체계 마련,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구분하고 금감위 사무국 설치(19인)
	기획예산처 TF	2000~2001년	· 현상 유지, 금감위 사무국 확대
노무현 정부	감사원의 카드 사태 감사	2004년	·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간 MOU 확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2008년	· 재경부 금융정책국+금감위=금융위 ·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겸직 불허
	금융 감독 혁신 TF	2012년	· 금융감독의 소프트웨어 개선 방안 제시
박근혜 정부	금융 감독체계 개편 TF	2013년	·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개편 논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년~	· 금융 정책, 감독 분리 방안 검토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료: 한국경제매거진 (2018.01.02.)

-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편방안 중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구분한다는 개편 방침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이 둘로 쪼개지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통합해서 맡아 오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감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실제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었던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도 거대 금융사의 부실과 도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전격 개편한 바 있음
 -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감독 업무가 서로 상충되는 만큼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판단임
 - 우리나라도 영국과 비슷하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감독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소비자 보호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 만큼 한 기관이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음

IV. 결론

- 2017년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금융위 간 관계에 따라 2년 연속 지정 유보로 결정됨
 -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유지하려는 금융위와 새롭게 권한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을 관리하려는 기획재정부 간의 역학 관계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한 지속될 것임
 - 이러한 논의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스스로 쇄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이를 둘러싼 기관 간의 정치적 관계 이외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보다 큰 제도적 변화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함
 -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매 정권마다 이루어졌으며 현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반 강력한 개편 의지를 보여줬으나 최근 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지적도 있음²²
 -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제도적 변화는 관련 조직 간 정치적 권력관계에 의해 좌우되거나 정권의 정책 추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금융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설계되어야 함²³

22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물건너 갔다」(2019.1.9.)

23 연합뉴스포맷, 「갈등만 키운 금융감독체계 개편...대통령 공약 파기하나」(2019.1.8.)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8.
- 금융감독원,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2015.
- 방영민, 『금융의 이해-금융시장·금융기관·금융상품·금융정책』, 2010.
- 노컷뉴스, 「초상집 된 금융감독원...역대급 감사 결과에 침통」, 2017.9.2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4/2018010401600.html, 검색일자: 2019.3.25., 검색일자: 2019.3.11.
- 서울이코노미뉴스, 「금융감독원, 감사원감사 후폭풍...무소불위 권한 줄이고, 법적 근거 만들어라 비난 이어져」, 2017.9.21.,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0>, 검색일자: 2019.3.18.
- 연합인포맥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시 어떻게 바뀌나」, 2017. 10. 2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0815090932252>, 검색일자: 2019.3.13.
- 한국경제매거진, 「10년마다 수술대 오른 금융감독 역사」, 2018.1.3.,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11&nkey=2018010201153000311&mode=sub_view, 검색일자: 2019.3.22.
- 중앙일보, 「금융위기10년, 금융감독체계 어떻게 바뀌었나...리스트 관리 중점」, 2018.1.05., <https://news.joins.com/article/22260363>, 검색일자: 2019.3.19.
- 머니투데이, 「한은·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제외 등 공운법 70건 국회 계류」, 2018.1.3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3015017631325>, 검색일자: 2019.3.13.
- MK뉴스, 「금융감독원 개혁 기대하던 기획재정부...금융위 반격에 뒤통수」, 2018.2.1.,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117010032000002005&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검색일자: 2019.3.20.

- 조선비즈, 「금융감독원 공공기관行 다시 불붙나」, 2018.12.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8/2018121801911.html, 검색일자: 2019.3.22.
- 연합인포맥스, 「갈등만 키운 금융감독체계 개편... 대통령 공약 파기하나」, 2019.1.8.,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0682>, 검색일자: 2019.3.25.
-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물건너 갔다」, 2019.1.9.,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422>, 검색일자: 2019.3.11.
- 경향신문, 「갈등 겪던 금융위·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앞두고 한 마음, 왜?」, 2019.1.1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1102109015&code=920301 검색일자: 2019.3.23.
- 경향신문, 「갈등 겪던 금융위·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앞두고 한 마음, 왜?」, 2019.1.1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1102109015&code=920301 검색일자: 2019.3.23.
- 서울경제, 「기획재정부-금융위-금융감독원 또 3각 갈등」, 2019.1.1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4/2018010401600.html, 검색일자: 2019.3.25.
- 이데일리, 「윤석현, 삼성생명 종합검사 대상...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안될 것」, 2019.1.18.,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64966622359032&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자: 2019.3.24.
- 매일일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또 수면위로」, 2019.1.20.,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89306>, 검색일자: 2019.3.13.
- the bell, 「독자적 행보 금융감독원에 제동 거는 모피아」, 2019.12.1.,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1170100032000002005&sv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검색일자: 2019.3.20.
- 뉴스시스, 「공공기관 지정 안된다는 금융감독원...명분은?」, 2019.1.2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2_0000537461&cID=10401&pID=10400, 검색일자: 2019.3.17.

- 비즈니스포스트, 「홍남기, 금융감독원은 3급 이상 간부의 비중을 35% 이하로 줄여야」, 2019.1.22.,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1455, 검색일자: 2019.3.17.
-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2019.1.30.,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6683&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9.3.18.
- 서울신문,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융감독원 15개팀 감축... 포용금융실 신설」, 2019.2.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08500130&wlog_tag3=naver, 검색일자: 2019.3.25.



소통의장

전문가의 눈: 공공기관 고졸채용

한동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현장의 소리: 새만금개발공사

정의윤 | 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기관장 인터뷰

독립기념관 | 이준식 관장

전문가 좌담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안

04



한동숙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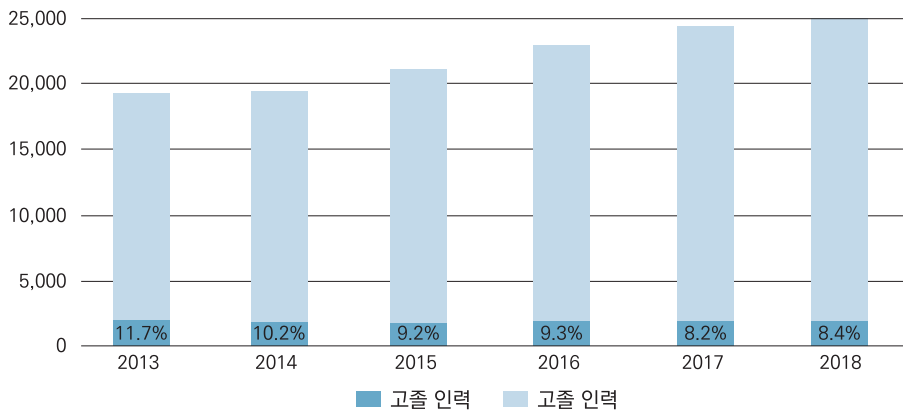
학력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공공기관에서 앞장서기

우리나라는 월등하게 높은 교육열로 2007년 이래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성장 추진력은 인적자원뿐이라는 믿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이유 불문하고 높았으며, 이는 고졸자에게 사회로부터의 패배감과 소외감을 갖도록 하였다.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는 학벌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보여주며 우리 교육의 민낯을 드러내지만 그러한 현실이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대학 진학을 위해 드는 사교육비, 청소년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OECD, 2018⁰¹).

01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 검색일자: 2019.1.27.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받는 시선이나 고졸자로서 직장생활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대졸자에 비해 고졸 취업자에게 취업의 문은 더욱 좁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여 중장년기까지 예상하면 대졸자에 비하여 직업 안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고졸채용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회적인 편견을 줄이고, 민간 부문에서도 고졸채용을 확대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 채용의 비율



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통계자료(www.alio.go.kr)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8년은 3/4분기까지의 현황 자료.

2014년 고졸채용에 관한 지침⁰²에서 신규채용 중 고졸채용을 20% 수준으로 권고한 이후, 공공기관은 고졸자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과 청년인턴제도 활성화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고졸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민간기업에 비하여 직업 안정성이 높고, 학력에 있어 차별적 관행을 폐지하려는 다각적인 혁신의 노력으로 고졸 취업자에게 공공기관은 취업만족도가 높은 직장이다. 문제는 취업난이 심각한 현재 시점에서 고졸 취업자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앞장선 고졸채용 확대 정책에도 불

0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 2014.

구하고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고졸채용의 규모는 2013년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신규채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고졸채용의 비중은 오히려 소폭 감소를 나타내었다.

단기간에 기관 전체에 대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고졸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공기관의 고졸 인력 활용 정착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고졸채용의 의무화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관리 정책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여지가 적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졸채용에 관해 단순하게 의무화된 비율로 접근하기보다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고졸 인력이 주로 배치되는 직종으로는 ‘사무관리직’과 ‘현장기술직’, ‘생산기능직’ 등을 꼽을 수 있는데,⁰³ 이와 관련한 업무가 주요업무인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고졸 인력 채용을 기대할 수 있다. 기관이 고졸 인력에 적합한 직군을 개발하고, 이 분야로 채용을 할 때 유의할 것은 고졸 직군의 승진, 보상체계가 차별적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고졸 인력의 보수 및 보상체계

고졸채용 가이드라인(2014)에서 제시한 고졸 인력 급여수준은 최소 대졸 초임의 70% 이상이다. 또한 근속승진 최소기간을 지나면 대졸 초임과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이 두 가지 권고사항이 모두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직급을 상세히 고려한 보수체계가 필요하다. 다른 직군 간의 차별화된 임금의 격차가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고, 고졸 인력에 적합한 직군의 승진이 지나치게 지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고졸 재직

⁰³ 김향아, 「최근 고졸채용확대 현황과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2013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3, pp.83-96.

자가 기간 중 직무에 맞는 대학교육을 이수하면, 이를 고려한 승진이나 직군 이동 기회도 보장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고졸 인력의 역량 강화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내신성적 관리뿐 아니라 자격증 준비,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 수집, 필기전형 준비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고졸채용에 성공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채용 수기를 보면 스스로의 노력도 높이 살 만하지만, 학교에서도 진로 설계, 실무 교육 등 질 높은 교육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부, 기관, 학교가 협력하여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넘어서, 고졸채용의 슬로건인 '선취업 후진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또한 중요하다. 고졸 직원 개개인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전공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학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는 기관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내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관 맞춤형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용하고 있다. 다만, 고졸 직원이 역량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복무제도와 같은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졸 인력 활용을 위한 인턴제도 확대

고졸 취업자의 경우, 대졸 취업자에 비하여 어린 나이에 직장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취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에서 제한이 있으며, 기관 입장에서도 인재의 잠재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인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체험형 인턴제도와 채용형 인턴제도로 분리운영되고 있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구직자에게는 경험을 통해 본인과의 적성과 알맞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게도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의 기회, 기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졸업 예정자 인턴제도 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면, 고용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고졸채용의 어려운 관문을 뚫은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물어보면, 입사 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발전해 나갈 기회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은 고졸 취업이 경제적 부담이나 능력 부족으로 등 떠밀려 내린 결정이 아니라 이른 나이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적성을 찾고, 입사하여 실무로 쌓은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 본인의 적성과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 서서 그 문을 넓혀야 한다. 올해도 정부가 고졸채용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진취적인 계획을 세운 가운데, 공공기관이 고졸 인력을 채용한 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고민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이 학력과 학벌 위주의 채용 문화에서 벗어나, 실무 경력도 교육기관의 학습과 동등하게 평가받고, 역량과 경력을 바탕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정의윤 과장
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Do Wonders’ 기적을 이루는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사업은 서울의 3분의 2배, 뉴욕 맨해튼 5배 면적의 국토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사실상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도시조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후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표류해왔다. 그동안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여 1,061만평의 땅을 매립했지만, 현재 들어선 시설은 31만평에 공장 6곳 정도가 전부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사업법」)이 개정되어, 2018년 9월 21일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목표

공사는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매립을 주요 목표로 한다. 그동안 민간에 의

한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제협력용지의 매립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현물(매립면허권) 1조 970억원, 현금 1,000억원을 출자받아 총 1조 1,97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으로, 사업이 진행될수록 자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공사의 정원은 80명이며,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2018년 10월 12일 23명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금년 3월에는 나머지 인원이 채용되어, 공사의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게 된다.

개발사업과 전략사업을 함께 수행

공사는 개발사업과 전략사업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은 크게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나뉘며, 전략사업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광·레저사업으로

[그림 1] 새만금 전체 조감도



나된다. 매립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공사의 특성상, 한동안 비용만 투입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광·레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요 임무를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협력용지에 도시 건설이 메인 프로젝트

그리고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은 6개 용지(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용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공사는 이 중, 매립을 통한 국제협력용지에 도시를 만드는 것을 메인 프로젝트로 하고 있다. 새만금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새만금 사업법」에 따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지난해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개정된 「새만금 사업법」이 적용되어 통합계획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협력용지에 조성될 도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기존의 도시와는 컨셉이 완전히 다르며, 운하가 도시의 여기저기를 관통하고, 나선형과 나뭇가지의 형상을 띤 도시가 형성될 것이다.

2.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공사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실례로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현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스타벅스, 아마존 등 세계 유수의 14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목표를 향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최대 소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전통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 생산비보다 태양광을 통한 전기 생산비가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넘어섰다고 한다.

새만금에는 총 2.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조 8천억원으로, 태양광 2.4GW·풍력 0.1GW·연료전지 0.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할

기적을 이루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 방법

지금 이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절호의 시점이자 기회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고, 동서·남북 간 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항만도 건설 중이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기적을 이루는 사업이다. 워낙 사업의 규모가 크고,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이 광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새만금을 깜짝 개발할 획기적인 방안도 없다. 시장성이 있는 사업을 하나씩 찾아내어 우직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도 공사는 'Do Wonders(기적을 이루자)'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본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겨레의 얼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준식 관장 | 독립기념관

■ 일시

2019. 3. 13

■ 장소

천안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진행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정리

박화영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지원

윤다솜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학력

- 1973. 3. ~ 1976. 2. 대동고등학교 졸업
- 1976. 3. ~ 1980. 2. 연세대학교 사회학 졸업
- 1987. 3. ~ 1991. 8.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 경력

- 2017. 12. ~ 현재 독립기념관 관장
- 2016. 5. ~ 2017. 12.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 2013. 10. ~ 2017. 12.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2006. 7. ~ 2010. 7.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2005. 9. ~ 2006. 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초빙교수
- 2002. 8. ~ 2005. 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 1999. 5. ~ 2002. 8. 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연구원

■ 상훈

- 2012. 6. 황조근정훈장 수상

■ 가계사항

지청천 장군 외손자(건국훈장 대통령장)

금번 [기관장 인터뷰(제65호)]에서는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님의 인터뷰를 담았음

Q.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정체성 함양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독립기념관의 기능, 역할 및 주요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립기념관은 1987년 온 국민의 성금으로 세워졌으며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세상에 바르게 알리고자 노력하는 곳이다.

또한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연구하는 연구사업과 수집·연구된 자료를 더 알



기 쉽게 국민에게 알려주는 전시사업,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우리 역사의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그리고 방문객의 편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 및 문화 사업 등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Q. 관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약 1년이 지났다. 그간의 자평과 함께 취임 후 기관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2017년 12월 독립기념관 11대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뿌리로서의 독립운동, 앞으로 이루어야 할 평화통일의 바탕으로서의 독립 운동사를 정비하는 데 독립기념관의 활동을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생각은 남북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높아진 이후 더 확고해졌다.

작년 한 해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북한 지역 3·1운동 관련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했고 이와는 별도로 북한 지역 3·1운동 사적지에 대한 문헌 조사를 완료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 발굴에 온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한 명의 독립운동가도 빠뜨리지 말고 찾아내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독립기념관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작년부터 독립운동가 발굴 TF팀을 꾸려 모두 361명의 독립 운동가를 새로 발굴했다. 올해에도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독립 운동가를 발굴하는 데 전제는 독립운동사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올 들어 몇 차례나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독립기념관에는 독립운동사 자료 발굴과 연구를 전담하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있는데, 개관 이래 30년 이상 소장이 비상임이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을 상임으로 하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는데, 작년에 직제 규정을 바꾸어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올 4월에 새로 상임 연구소장을 임용할 예정이다.

연구소장의 상임화와 더불어 연구 인력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작년에 연구소 연구원을 4명 증원했고 올해에도 3명을 더 증원할 예정이다. 현재 연구소 연구원이 모두 14명인데 올해 새로 임용할 3명을 포함해 3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만 연구소가 말 그대로 독립운동사연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Q. 올해의 경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독립기념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념사업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A. 3·1운동 하면 많은 사람이 거족적·민족적 독립운동을 떠올린다. 당시 약 두 달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대한독립만세가 메아리쳤다.

일부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계층과 직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 더 큰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바로 ‘주권재민’ 의식에 바탕을 둔 독립운동이라는 점이다.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시작되자마자 곧 민국(民國), 민간정부 등의 이름 아래 임시정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들 임시정부 수립 운동은 모두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향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임시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출범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1919년은 대한민국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가 단순히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그치지 않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독립기념관도 이처럼 뜻깊은 100주년을 맞아 여러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정부가 주최하는 3·1운동 100주년 전야제 행사를 가졌고 3월 1일에는 충청남도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백년의 집’을 독립기념관 경내에 짓는다는 협약을 맺었다. 3·1운동 관련 학술회의와 중국, 미국, 일본 해외특별 순회 전시회도 준비 중이다.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3·1운동 관련 중요 자료, 예를 들어 독립선언서, 태극기 등의 원본을 3월 1일에 맞추어 3·1운동 주제관으로 재개관한 제3전시관에서 특별 전시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올해부터 4월 11일로 바뀌는데 독립기념관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여는 한편 기념관에서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갖는다.

또한, 독립기념관은 2024년 완간 예정으로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141명의 독립운동을가 수록한 『독립운동인명사전』 특별판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Q.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독립기념관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더 많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독립정신, 독립 운동가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루려고 했던 꿈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독립기념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1945년 8월의 광복과 1948년의 정부 수립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자주독립을 위해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피땀을 바친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름도 없이 만주 땅에서, 연해주 땅에서, 중국 땅에서 사라져간 이들의 피땀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책무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독립 운동가들의 꿈을 이어받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책무일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과 광복군은 남의 나라 땅에서 독립전쟁을 벌여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려고 했다. 말이 쉬워서 무장투쟁이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하는 중국도 한국광복군을 중국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다.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지도자들은 그런 중국 정부에 대해 광복군이 한국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임시정부의 국군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쳤고 결국에는 중국이 이를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독립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다. 완전한 자주독립, 민주공화국, 자유, 평등이 바로 독립정신의 요체라는 사실을 더 많은 국민이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Q. 최근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독립기념관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독립기념관에는 통일염원의 동산이 있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타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종도 있다. 독립운동과 통일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독립운동이야말로 통일을 위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의 역사 자체가 독립

운동 진영 사이의 연대와 통합을 이루어나간 역사이기 때문이다.

독립 운동가들은 늘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꿈꾸었는데 여기서 완전한 자주독립이란 바로 민족통합이 이루어져 그 통합된 민족의 힘으로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을 말한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평화공존,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다. 이런 때 민족 통합을 지향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고 교육함으로써 평화공존, 평화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독립기념관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⁰¹, 북한과 독립운동사 관련 교류를 이루어나갔으면 한다.

실제로 10여 년 전에 북한의 혁명박물관과 교류협정 체결 직전 단계까지 논의를 이어 나갔고, 인민대학습당과는 단재 신채호 선생 자료 수집에 원칙적인 합의까지 이루었다가 두 사업 모두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중단된 적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 안에 다시 재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남북의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동질적인 요소를 찾아냄으로써 이질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립기념관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북한과의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이 모두 높게 평가하는 3·1운동 관련 자료 가운데 북한에 남아 있는 자료의 공동발굴과 수집도 그 가운데 하나다.

남북에서 모두 존경받는 안중근, 홍범도, 신채호 등의 독립운동가 관련 공동 기념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몇 해 전부터 3·1운동 관련 북한 사적지에 대한 문헌조사를 벌여 왔는데 작년에 조사가 다 끝나 아주 긴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남북 공동사업으로 북한 지역 3·1운동 사적지 현장조사를 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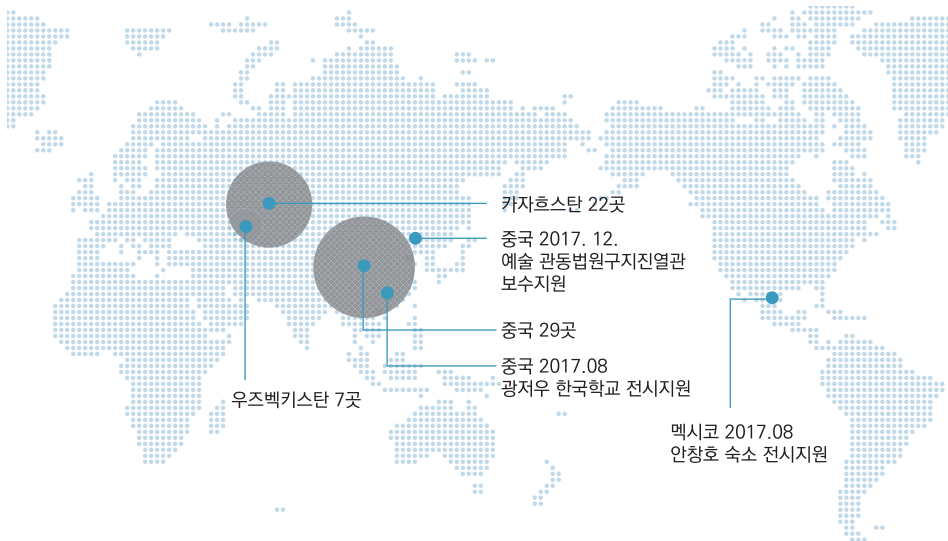
01 여기서 여건이란 정부의 승인과 북한의 협력을 말한다 (출처: 독립기념관기관 제출자료)

Q. 해외 독립운동 조명을 위한 그동안의 독립기념관 측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독립기념관은 지난 30년 동안 해외에 소개하는 독립운동 자료를 많이 발굴했다. 특히 중국, 미국, 일본의 자료를 발굴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해외 독립운동의 또 다른 거점이던 러시아의 자료를 발굴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러시아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모스크바 지역의 자료를 대거 수집할 예정이다.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은 국내의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그 결과 상당한 사적지가 확인되었다. 사적지 가운데서도 해외 사적지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이 국가보훈처의 위탁으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사적지 가운데는 특히 중국의 사적지가 많은데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 굴곡을 겪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사적지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통해 사적지가 잘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1]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지원 및 실태조사



출처: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독립기념관 (<https://blog.naver.com/koreai815/221291160452>) 검색일자 : 2019.3.14.

Q. 최근 뉴욕주 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기념관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궁금하다.

A. 나 자신이 모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어서,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기 전부터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글도 쓰고 강연도 하러 다녔다.

사실 전체 독립운동가 가운데 확인된 여성 독립운동가의 숫자는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여성 독립운동가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안에 꾸려진 독립운동가 발굴 TF팀을 통해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데 온힘을 기울이겠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역사연구회와 공동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를 널리 알리는 대중강연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강연 원고를 발전시켜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도 계속 펴내도록 하겠다.



Q.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효율성, 수익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⁰²,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를 측정하여 반영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저고용 등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⁰³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는데⁰⁴, 이러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독립기념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고 싶다.

A. 사실 독립기념관 같은 공공기관은 효율성,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독립기념관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관람객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독립기념관법」을 바꾸어 무료입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장료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좋은 살아 있는 독립 운동사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라 법이 개정된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국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졌다.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기관인 셈이다. 그래서 관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직원들에게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고는 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립기념관이 개관 이래 천안이라는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지만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작년부터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독립기념관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요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전면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요한 계기 일에는 지역주민에게 주차료를 감면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이 2017년부터 단풍나무 숲길 힐링 축제를 열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 독립기념관을 찾아와 역사와 자연을 함께 만나볼 것을 권유하는 것도

02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편」 2017.07. 검색일자 : 2018.1.23.) - '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노력"에 10점 가점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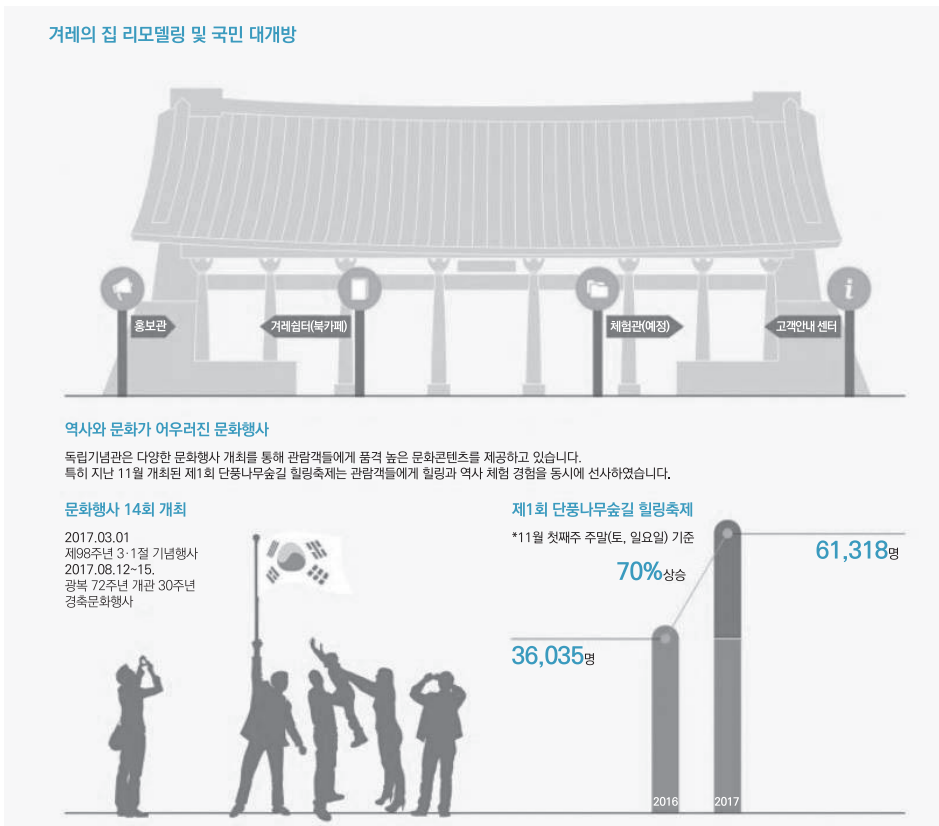
03 사회적경제: (정의)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

04 출처: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10. (http://www.most.go.kr/nw/nes/detailNesDetail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11272) 검색일자 : 2018.1.2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참고로 작년 두 번째 힐링 축제에는 이를 동안 10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독립기념관을 찾아왔다.

[그림 2] 문화 콘텐츠 제공현황



출처: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독립기념관 (<https://blog.naver.com/koreai815/221291161960>) 검색일자 : 2019.3.14.

Q. 관장님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근현대사 기념관 관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셨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독립기념관 관장직을 수행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관장님의 경영철학과 비전이 궁금하다.

A.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기 전에도 이미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독립운동사 연구자로서 독립기념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역사 연구자로서는 다행히도 친일파 청산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 등의 실천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도 독립기념관 관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독립기념관의 사업은 자료 수집, 연구, 전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연구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자료 수집과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년 동안 독립기념관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독립기념관이 문을 연 직후에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그야말로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이었지만 여러 이유로 침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전시와 교육 분야의 사업이 오히려 돋보이게 되었는데 내가 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료 수집과 연구 분야의 사업을 다시 활성화해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체제를 갖추고 싶다.

Q.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 기관장의 한 분으로서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 나,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공공기관에게 본연의 임무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의 경우는 더 그렇다.

아직도 독립기념관을 수익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재단하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쉽게 이야기하면 독립기념관처럼

비효율적이고 자체 수익도 적은 기관에 국가 예산을 쓰는 건 낭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은 한 해에 독립기념관을 찾아오는 165만명 남짓의 관람객에게 독립 운동사를 중심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단지 수익과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재단할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해외 동포 사회는 물론이고 국내 벽지의 학교와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전시하고 교육하는 일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무형의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독립기념관의 존재 의의를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주무부처	국가보훈처			기관유형 (평가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소형)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041-560-0114 / www.i815.or.kr)			기관장 (임기)	이준식 (2017.12.18~2020.12.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2016년 결산기준)	납입자본금	주주 구성			
		정부	공공기관	기타	
	-	-	-	-	
설립근거	• 독립기념관법			설립연도	1986. 8월
설립목적	•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및 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함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02월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설립 • '86.05월 독립기념관법 공포시행 • '87.08월 독립기념관 준공 및 개관 • '05.05월 소관부처 이관(문화관광부 → 국가보훈처) • '08.01월 관람료 무료화 시행 				
주요기능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난 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조사, 연구 •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 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 기념관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안

일자 · 장소 2018. 12. 14.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 회 성시경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

참 석 자
(가나다순)

곽채기(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경재(한국철도공사 경영평가처장)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용석(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오철호(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민창(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용남(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정 리 허민영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본 좌담회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편집자 주)



성시경(사회자)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

공공기관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35년 역사의 경영평가, 미래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소주제로 맞춤형 평가를 위한 방안, 사회적 가치와 혁신평가 방안, 공공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방안, 경영평가단의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 방안 등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첫 라운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맞춤형 평가 방안과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기업(투자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던 반면 준정부기관(산하

기관)의 경우 효율성이 부족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 통합적인 경영평가가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공기업이 점점 더 준정부기관(산하기관)화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현재 2트랙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나누어져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기업 특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공기업 평가모델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평가단 분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기업(투자기관)을 시장형(60%)과 준시장형(40%)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2018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서 평가제도의 문제점 중 상당수가 개선되었다고 평가

한다. 공공기관 노조들 역시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서열화와 이에 따른 성과급 격차라는 근본문제는 아직 개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우선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 또는 시장 환경의 영향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고 있고, 그 실적 차이가 미세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성과급의 격차는 크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경영평가 우수기관이 되어도 그 공공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오로지 직원은 성과급 문제, 임원은 인사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평가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낮춘다고 본다.

기존의 미세한 경영성과 차이로 인한 평가 서열화 문제를 개선하여 확실히 뛰어난 성과 혹은 과오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가치 평가 및 절대평가 방향으로의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평가유형별로 또는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주기를 2~3년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를 위해 경영평가를 도입했다면, 성과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래 목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효율성 관리가 필요하다면 효율성 관리를 어느 정도 할지 결정이 필요하다. 공기업 중 상장된 기업의 경우는 실제로 성과관리의 책임에 대해 정부의 경영평가가 아닌 주주들이 평가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 평가단의 편성, 운영, 설계가 혼돈기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위탁집행형과 같이 예산과 사업이 정해진 기관에 대해서는 과도한 성과를 요구하기 힘들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분리되었다면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재 핫 이슈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지 우려가 된다. 그 이유는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내용 중 일부 기관에서는 실적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관별 맞춤형 지표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본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평가단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 맞춤형 지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경영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지표 개선의 큰 방

향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 및 경영혁신 관련 지표들 중 상호 평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통합 정비하여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현행 경영평가 지표체계에 대한 메타 평가(meta-evaluation)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철호 송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유해야 하는 경영평가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영평가 모습을 보면 평가의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가 불분명해지는 것 같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평가제도의 성과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경영평가는 평가가 아니라 성과 측면에서 현재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경영평가는 Input-Output 모형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과정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To-Be 모형이 설정되고 미래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평가를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의 경우, 특정한 지표가 아니라 경영평가의 전 분야에 넣은 이유는 이를

한 개의 지표로 넣었을 때 공공기관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적만을 강요하는 특정한 지표를 통한 접근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과제만을 양산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경우 중요한 것은 평가를 위한 과제화보다는 기관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영평가제도는 문화를 혁신하는 과정보다는 당해 연도의 실적에 공공기관이 몰입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회적 가치는 특정 행위(즉 과제군) 하나로는 평가가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경영평가에서는 일괄적으로 5개 과제로 평가되는 점은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및 산업 맞춤형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정용남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분리된 평가단이 실제 의미 있게 운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경영관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비슷한 것으로 여겨졌다. 평가의 전문성, 평가의 수용성 차원에서 주요사업은 현

재 보다 평가단을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형이 비슷한 공기업은 같은 평가그룹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 평가위원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평가 내용 균질화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평가위원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피 평가기관의 의견 청취도 중요하지만, 제3자가 평가위원의 평가 내용, 보고서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위원 풀(pool)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가의 수용성, 평가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관여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경재
한국철도공사 경영평가처장

그동안은 경영평가가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본연의 업무에 맞추어 공공성 측면이 평가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맞춤형 평가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평가단의 일이 많아질 것이다.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개별 공공기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획일화된 지표로 인해 기관에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평가기준에 따른 유불리(有不利)가 발생하지 않는다. 평가단의 구성문제도 주요사업의 평가위원의 경우 주무부처의 추천제도 고려해볼 만하며, 평가단 구성 시기도

6월 평가결과 발표 후 바로 차년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피평가기관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평가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단의 방법이 될 것이다.

성시경 좋은 의견 감사하다. 두 번째 라운드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부담 완화에 대한 주제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이민창 실제 경영평가 부담은 평가 수감의 부담으로 생각된다. 평가의 부담은 평가 지적사항을 차년도에 어떻게 기관 운영에 반영할지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기관 차원에서 차년도에 금년도 평가 결과를 잘 반영했는지의 문제가 기관의 평가부담인 것이다. 평가등급은 서열화가 아닌 기관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제도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높아야 하며 특히 지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기관 차원에서 전년도 평가결과를 차년도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박용석 평가의 목적이 공공기관의 사업 및 경영 성과를 높이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그간 효율성 일변도로 인식되어온 경영평가에 대해 명칭 변경을 통해 성과평가제도로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사회적 가치의 경우, 각각의 평가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 운용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를 별도의 평가 범주로 설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평가 지표의 세부평가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경영관리의 효율성의 평가 내용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평가 서열화가 동기 부여의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박정수 경영평가를 일반화하면 성과관리, 성과평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시장화되어 있는 한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성과를 두 달여 간 만에 평가한다는 것이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에 대해서 순기능도 있지만 순응(compliance)이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 평가결과로 인한 인센티브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본다. 평가단에 임기를 부여하고 현재보다 훨씬 미리 구성하여 차년도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도 계량지표에 대해서 지표 관리를 지속하여 평가단과의 분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경재 기관 차원에서는 평가결과를 차년도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기관에서 평가의 결과에 예민한 부분은 성과급 측면이다. 성과급 차등 폭 축소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절대평가 도입의 경우 등급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 수용을 위해 합리적인 설명을 기관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주요사업의 경우 기관마다 사업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평가는 평가의 수용성을 떨어뜨린다. 사회적 가치 지표의 경우도 공공기관의 본 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정용남 공공기관 재직 시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면, 평가의 수검 부담도 있지만 평가로 인해 기관이 일 년 내내 부담을 느끼는 점을 듣고 싶다. 평가를 통해 기관의 경영 및 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평가시 적용하는 PDCA 모델의 경우 공기업 등은 적용이 가능하지만 위탁집행기관의 경우 P(계획)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지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관은 외주화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평가가 기관의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

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의 표준화, 시스템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역할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가지표 작성 및 개선과정에서, 상당수의 지표가 관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 지표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지표 설정 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오철호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본다. 정부의 역할도 이끄는 역할(pusher)에서 조력자의 역할(enabler)로 변화해야 한다. 과거 행정이 비교적 단순했던 시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했으나 행정의 복잡성과 상호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 현재는 정부의 역량은 한계가 있으므로 더 이상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혁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역할 교체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수많은 평가 중 왜 경영평가에서만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립성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평가단의 역할이 정확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평가는 하나의 사 이클이므로 큰 틀은 기재부에서 마련하고 실제적인 실행과정은 평가단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고 본다. 또한 평가단의 독립성이 이루어지면 평가단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평가위원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특히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져야 한다.

평가의 전문성의 경우, 대부분은 주요사업 부문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문제는 평가위원이 기관의 평가대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속지가 충분하지 못하고 경영평가를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 정도가 평가 담당자에게 기대되는 통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도 있다. 앞으로 특히 주요사업을 담당할 평가위원 구성의 경우, 주무부처나 관련 학회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의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다. 즉 사전교육 또는 훈련을 충분히 그리고 철저하게 이수하게 하고, 이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평가위원 예비 풀(pool) 등을 구성한 후 새롭게 평가단을 구성할 때 이 풀(pool)에서 평가위원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곽재기 당장 개선이 필요한 경영평가 지표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자 한다. 평가지

표의 설계가 평가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현재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가 아니라 평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주요사업 범주의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관의 경영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라기보다는 평가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지표의 가중치가 주요사업 범주 전체 비계량지표를 관리하는 “주요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지표 가중치의 50%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성시경 이번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토론해 보고자 한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김경재 적시성 있는 평가관리가 필요하다. 평가 보고서 작성 지침의 경우도 12월까지의 사전에 고지되었으면 한다. 또한 평가 보고서가 8월쯤 나오는데 피드백할 시간이 너무 적다. 이런 문제 등 기재부와 평가단 차원에서 평가 시스템의 일정 등 평가받는 기관을 배려해주셨으면 한다.

정용남 기본적으로 평가에서는 신뢰와 신뢰기록이 중요하다. 평가에 대한 신뢰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평가제도 개선은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 신뢰 수준이 낮으면 모니터링과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연구센터와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평가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에 대해서도 기관에 의한 포획을 염려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평가위원의 평가 질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좋을 경우 평가의 주기 조정, 부처에 의한 보증 시스템(assurance system) 등의 도입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철호 그동안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 관련 평가 설계가 잘 되었는지 실행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등을 포함하여 경영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메타 평가(meta-evaluation)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 경영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다면 공공기관연구센터라도 자체적인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의 경향 중 하나는 네트워크 기반 평가 방식이 있는데, 폐쇄적인 평가단 중심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시 이런 시도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공공기관 연구센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늦기 전에 경영평가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시계열 데이터 관리 및 연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곽채기 경영평가단의 전문성 문제는 신뢰성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보이지 않으며 3년 단위로 평가위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단 구성 이후에는 평가위원을 신뢰하는 전제하에 평가 시스템을 운용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민창 평가단 거버넌스(기획재정부·경영평가단 -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평가관리 프로세스와 평가평정 관리 프로세스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평가관리 프로세스가 취약하다고 보며,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평가 전반에 대한 인프라와 준비를 맡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평가단이 3개로 운영되다 보니 평가단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다.

박용석 평가주기를 늘림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평가단이 피평가기관의 업무 및 기관 내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한다면 평가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의 경우도 공공기관에 대해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진 문제에 대해 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발전사 민영화 목표 아래 분할 경쟁 운영하면서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주화, 인력감축 등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본다. 효율성에 치우친 나머지 안전이 외면되고, 유연탄 사용 과정에서 환경 문제도 나타난 것이다.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기형적으로 분할 운영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문제점도 되짚어 봐야 한다.

박정수 여건이 좋아 계량평가 결과가 좋은 기관과 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기관 간에는 차등화를 분명히 해 기관이 스스로 노력하게끔 편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편람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이런 편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경영관리보다는 주요사업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봐야하는 지표도 있으며 지표의 성격에 따라서 모든 지표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Pass/Fail의 지표도 필요하다고 본다.

성시경 이번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잘 정리하여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 편집위원

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편집장)
유승현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총괄 / 출판담당)
봉우리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연구동향)
김준성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정책동향)
이강신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해외동향)
유승현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심층동향)
임희영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공공정책포럼)
박성훈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전문가의 눈)
윤다솜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현장의 소리)
박화영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기관장인터뷰)
허민영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전문가 좌담회)

※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의 모든 콘텐츠는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oe.kipf.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044-414-2457)

KIPF 공공기관 | 2019 vol. 29
이슈포커스

2019년 4월 15일 인쇄
2019년 4월 18일 발행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표)
<http://soe.kipf.re.kr>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ISSN 2635-550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kip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 www.kipf.re.kr